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과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외교부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마찰이라고 하시면 분쟁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만 위원** 분쟁이 마찰 중의 하나일 수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독도를 두고서 분쟁의 이슈가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라고 할 때는 분쟁의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본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김용만 위원** 참 당연한 답변인데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냐 아니냐는 외교적 마찰에 해당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해당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나 독도에 대한 언급을 좀 꺼려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외교부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부합되지 않는 면모가 좀 보였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독도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가지고 공항철도 열차 내 독도 홍보 영상 사업 이것 하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 제외하고는 독도 홍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 또한 최근 5년 동안 예산이 동결이 됐더라고요.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교부가 독도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독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최대한 로우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분쟁 사항이 아니게끔 처리하는 것과 문제가 있을 때 단호히 대응하는 것에는 상당히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재외공관의 홍보 사업을 통해서도 독도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인사들이 방한을 할 경우에 반드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법과 관련한 학술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에 대한 홍보, 우리가 다른 지역들도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꼭 굳이 로우키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음지에서만의 노력으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심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지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노력들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의 활동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장관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이지요. 독도의 날에 KBS에서 방송됐던 ‘독도 없는 대한항공 지도’ 뉴스 혹시 보셨나요? 대한항공 국적기에서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이미 시정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독도 미표기 문제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좀 강화하고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지웠었고요. 그리고 당시 외교부기는 합니지만 일부 재외공관, 아까 얘기하신 재외공관에 홍보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독도가 누락된 지도를 배포했었고요. 또 24년 민방위 교육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는 와중에 지금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에서 지도에 독도가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제보를 받은 건데요.

PPT를 봐 주시면 이게 20년 전에—그러니까 2005년 7월입니다, 정확히—서경덕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뉴욕타임스에 올린 우리 독도 한국 땅 광고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지요. 이런 노력이 20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세요? 좀 나아졌다고 보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 입장에서는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김용만 위원 계속 이어서 PPT 봐 주세요.

19년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1853년에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독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2년까지도 바뀌지 않다가 이제 일부 바뀌었는데요. 지금 2025년 현재에도 42개국 구글 지도에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라고 철석같이 믿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자주 쓰는 플랫폼이겠지요, 구글이라고 하면.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 관련해서 자주 쓰는 앱이 여행 앱이겠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용만 위원 그 여행 앱에 보시면, 아고다라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라고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호텔스컴바인이라고 또 유명한 여행 앱이 있지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들어가면 독도라고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이게 외국어로 바뀌면, 예를 들어 프랑스어 독일어 칠레어 스페인어 이렇게 바뀌면 이게 또다시 리앙쿠르 암초 혹은 독도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알아 가고 또 확인해 가면서 좀 근본적인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항상 국민들이 제보를 해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정부가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독도 미표기 건은 저희가 준비를 했던 기사인데 그걸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오류를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느꼈는데 이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외교부차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고 일본 땅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독도 표기를 바로잡는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PPT 봐 주세요—이 예산을 계속 줄여 간 거예요. 독도 표기를 방치한 거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정부가 조금 더 사전적으로 국민들이 제보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주객전도적인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위임을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대응하고 시정하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한 건데…… 그리고 또 세금도 그래서 내시는 거고요.

일단 선제적인 역할을 검토해 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그 역할을 준비할 때까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예산에 있어서도 증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부장관님께 이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시작, 건국이 언제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제까지 건국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제헌헌법 전문, 현재 헌법 전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사 그다음에 관보 1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고 세계에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호는 1919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마찬가지로 1919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48년 7월 24일이었는데도 그때도 연호가 대한민국 30년……

○**김용만 위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4월 11일로 본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거기 대한민국 3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만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관보 1호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1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잘 정리를 해 주셨지요.

그런데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쿼게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나 싶어 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용하는 1위 포털 사이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문제지요.

다른 것도 물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국적은 공식적으로 일본제국의 국적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조차 뉴라이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습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나 극우 뉴라이트들이 건국절이니 일본신민이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헌법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국민분들의 역사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교육부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만 위원** 차관님, 제가 제보받은 파일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한 얘기인데요. PPT 한번 봐 주세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931년이구요. 누가 만들었느냐? 김구가 만들었고요. 뭐 하는 단체냐? 의열투쟁단체예요. 의열투쟁이 뭐라 그랬어? 테러, 테러. 김구가 의열단 만든 김원봉을 욕을 그렇게 했다, 무식하다고.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근데 이제 지가 하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김용만 위원**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이 어린 학생들 교육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만 위원** 그래서 지난 10일에 리박스쿨 사태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안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늘봄 방과후교사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도 교육활동에 있어서 중립성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성 의무라는 모호한 표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걸로 역사왜곡 막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원칙을 저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5·18 관련된, 민주화운동 관련된 교육을 역사강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무슨 좌파니 빨갱이 역사인식을 주입하느니라고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만들었던 이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왜곡된 역사교육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는데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만·불평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교육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만 위원** 마지막으로 행안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들어 주셨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용만 위원**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 8월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고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것이고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니 일본 땅이니 되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것인데요. 말인즉슨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 5개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거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이 있는데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이제 국경일로 승격을 해서 건국에 대한 확실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 엄중하고 무거운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제안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요 우리 입법 조사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새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당연히 우리 땅인데 뭐 그렇게 조치하냐’ ‘이게 오히려 외교적으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부터 국토 참전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장관님들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말인즉슨 역사나 우리 뿌리를 담당하는 보훈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관, 그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국가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때 흔들렸던 이 근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냥 또 하나의 질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꼭 부처로 돌아가셔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정체성에 있어서 각 부처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끝내셨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만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독도의 영유권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한 위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어제 사직서를 냈는데 법무부에 도착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 답변하느라고 끝나 가지고 그 이후의 법무부 상황은 아침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직까지 면직안은 대통령실로 보내지는 않았겠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중앙검사장에 대한 사직서는 접수됐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접수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면직안은 대통령실로 보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어제도 하루 종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나타난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은 대장동 개발 전체 사업이익을 7886억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확보한 실제 순이익은 6056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1830억, 도개공이 배당받을 수 있던 배당이익을 6725억 그리고 검찰이 제기한 배임 피해액은 택지분양사업 배당금과 대장동 일당이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분양사업 이익금의 70%로 봐서 4895억 그리고 1심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은 검찰과는 달리 1심 법원은 택지분양사업 배당금의 50%만을 손해액으로 봤기 때문에 1128억 원이 실제 손해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한 추정금은 7815억, 일부 언론에는 7400억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상에는 얼마를 구형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 추정금은 합쳐서 473억 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7341억 상당의 추정금을, 대장동 일당의 이익금을 추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들입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지난 10월 31일 1심 선고까지 약 3년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1심 판결 이후에 남은 것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수천억대의 불법이익 환수 불능 그리고 검찰총장대행·서울중앙지검장 사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886억 원의 대부분인 7815억 원을 추정해 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추정 요청액의 6%에 불과한 473억 원만을 추정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전체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 게 지금 판결문 어디에도 이게 전체 배당액인지 아니면 비용을 차감한 수익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게 검찰의 공소사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 물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배당이익 이것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손실액은 1100억 원 상당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는 도개공이 받아야 될 배당액의 비중을 갖다가 70%로 봤습니다. 그러나 최초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서도 50%라고 주장, 검찰에 얘기를 했었고요. 70% 관련해서는 성남도개공에 대부분 보냈다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는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 그리고 추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의 추정금 상한액은 1심이 정한 473억 원 이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욱과 정영학은 단 한 푼의 추정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배당이익 등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헌법에서 형사·민사 재판에서 삼심제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2심과 3심을 통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게 깡그리 무시가 됐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무부장관 정성호** 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도 저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구체적 의견의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무죄의 이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봐 갖고 검찰에서도 항소심에 가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항소하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점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이 항소심, 2심과 3심에서 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판단을 못 하고 저도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관님을 비롯한 여당의 상당수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추정금이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판시를 합니다. 판결문은 명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

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저기 PPT에서 KZ라고이니셜 처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고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민사소송으로는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400여억 원을 추정해야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 민사로 회복 가능하니 추정금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1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1심 판결의 이유는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몰수·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피해 환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을 선고하고 추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환부해야 된다고 1심 판결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어쨌든 1심 판결의 기초는 부패재산몰수법의 단서조항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1심 민사소송이 중단돼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업무상 배임의 입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피해액 같은 경우는요.

○**정점식 위원** 장관님, 그러면 다시 그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멈춰져 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민사소송으로 과연 피해 회복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식으로 배임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 부분도 면소 처리가 되어서 형사상 추정 근거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이전에 변호사 시절에 민사소송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됐을 때 그 형사소송에서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된 범죄사실 그리고 입증된 손해액을 민사소송에서는 완화된 입증 책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지금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습시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는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 역시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가 그리고 그런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면소로 끝난 사건을 민사에서 다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은 완전히 막혔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특경법상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50억 원을 초과해야 특경가법이 적용 가능한데 50억을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과연 1심의 판단이 옳으나, 그러니까 사업협약 시점에 추정 가능한 배임액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걸 2심에서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2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김만배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공사가 실제로는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배임죄의 기수시기의 손해액 산정 여부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 기회가 상실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구정보다도 더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가 더 받아야 될 이익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몰수·추징 보전된 그걸로도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점식 위원 왜 장관님께서서는 소위 1심이 확정된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될 금액이 1100억 원이라고만 판단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개공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검찰이 주장한 4500억이 아니라 1100억 원이다. 이게 맞다’라고 왜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항소 포기과 관련해서는 어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항소 포기과 관련해서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판결 선고가 있어 갖고 그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일반적인 사건 보고 때 판결 선고 내용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부분도 있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동안 제가 무죄 부분 관련한 항소 여부는 늘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게 11월 6일, 그것도 저녁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항소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그날 예결위 종합질의를 마치고 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받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검찰국장한테 보고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 검찰국장, 차관이 다 국회에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검찰국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의 주체가 누구였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과장이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검찰총장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의 뜻을 전한 사람은 법무부차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와 의견 조율이라고 말씀을 계속 법무부 쪽에서 하는데 의견 조율을 할 때는 검찰국장과 실무자인 반부패부장이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총장대행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관의 뜻이 확고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게 모두 항소 포기를 하는 방안이었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께서서는 지금 소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 장관님께서서는 2019년 7월 8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 대한 관련 언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것은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보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저도 보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장관님께서서는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도 검찰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건보고를 받아 갖고서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물론 당연히 사건보고를 받았을 때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게 항소해도 되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

니다.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져야겠지만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런 언급 자체도 결국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했어야 한

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배상해야 할 국가배상금 내년도 추계액이 3800억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수사와 또 기소, 경우에 따라 이유 없는 항소 이런 것들로 발생한 형사배상금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그 원인된 사실은 국가의 불법행위입니다, 거의 모두 다.

○김상욱 위원 그동안 검찰에서 무죄 시에 기계적인 항소를 해 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정말 항소 실익이 있는, 항소의 필요성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과거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재심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다음에 구형에 있어서, 재심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온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심 사건 그런 것 관련해서, 재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계속.

○김상욱 위원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상욱 위원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개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또 항소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나온 경우 대개 항소를 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뭐 3분의 2 이하도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2분의 1 이상 형 선고가 나왔을 때는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그 기준에 벗어난 건 아닌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양형의 측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형이 더 나왔습니다. 구형량보다 형이 더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구형량은 수사검사들이 판단했을 때 최고형이거든요. 두 명이 그보다 더 나왔고 나머지 도 2분의 1 이상 더 나왔습니다.

다만 무죄 부분 관련해서는 법리 판단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 저도 판결문을 대충 읽어 봤지만 1심 판단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툼은 없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대장동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없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을 때 ‘검토하라’ 이게 어떤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대개 원론적으로 사건보고를 받을 때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의견입니다, 의견을 냈던 겁니다.

○**김상욱 위원**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과거의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 왔습니다.

○**김상욱 위원** 노만석 직무대행이 법무부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차관이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김상욱 위원** 국민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법무차관에게 분명히 얘기한 건 법무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이건 수사지휘가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수사지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욱 위원** 대장동 사건 1심 결과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법률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사람으로서 판결문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또 밖에, 외부에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도 이 판결을 한번 좀 분석해 보라고 그런 요청을 해 봤을 때,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개발업자들이 일부 공무원들을 매수해 가지고서 한 불법행위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법리적 판단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재판을 3년 10개월 동안 해 왔습니다. 3년 10개월 동안 해 와서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장 입증을 했는데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제가 들은 견해입니다.

○**김상욱 위원** 이번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김상욱 위원** 검찰의 담당자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현재 저도 구체적인 내막,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욱 위원**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상욱 위원**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남옥 변호사가 배 가르기 주장,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재판 결과 나중에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건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기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관련된 그런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정치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원래 문제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 가지고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또 진술 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상욱 위원**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트럼프 관세 명령 근거 법령이 IEEPA 법령이지 않습니까? 지난 외교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IEEPA 법령의 긴급성 요건 불충족 그리고 또 IEEPA 법령 보면 관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잘못된 트럼프 행정명령이 될 수 있다,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예상한 대로 1심에서 트럼프가 패소하고 2심에서도 트럼프가 패소하고 3심 연방대법원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11월 5일에 구두 변론이 있었을 때 적어도 6명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향방이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김상욱 위원** 일각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관세 명령이 최종적으로 IEEPA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는 형태로 트럼프가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에 대해서 환급 절차가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된 채권이 거래되는 그런 얘기들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파장, 지금 관세협정에 대한 파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다른 조항, 즉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등을 동원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김상욱 위원**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관세의

근거법령은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거뒀었던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가 남을 것이고 또 한미 간에 관세협상을 한 것이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법령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미 간에 맺었던 투자 관련한 협의들은 상당히 안전조치로서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EEPA 관련한 소송은 사실 품목관세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투자 MOU를 비롯해서 협의를 했었던 것은 상호관세에 더해서 자동차나 항공기, 의약품 등 품목관세와 관련한 그런 인허가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무래도 미국과 무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의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들도……

○**김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김상욱 위원**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교부가 앞장서서 각 시나리오별로 세밀한 대응,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상욱 위원** 재난대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비 어떻게, 왜,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책정한 항목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난대책비는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복구 또 가능하다면 예방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올해 재난대책비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

○**김상욱 위원** 1조 100억 4000만 원 책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나 2025년도보다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상욱 위원** 재난대책비가 제 생각에 향후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비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심지어 이번 2026회계연도도 보면 재난대책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책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 또는 일어날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투입되기 위한 재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어난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2024년도를 보면 전체 재난대책비 6000억 원 가운데 5403억 원, 약 90%가 재난복구비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3600억 중의 67%가 그 전년도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비, 올해도 1조 100억 4000만 원 중의 8100억 원이 올해 여름에 났던, 그러니까 이미 지난 재난에 대한 복구비, 그러니까 2026년도 내년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비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내년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비는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분하지는 않으나 재난복구비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재난이 있었던 곳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복구를 해서 재차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구비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재난도 우리가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대응비, 과거보다는 당연히 더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곳을 복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재난대응비를 복구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재난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2024년도에는 재난대응비가 부족해서 35개 사업에서 537억 원을 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한 항목을 보면요 제주 4·3 피해보상사업 또 민주화운동 기념지원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비 또 청사시설 관리위탁사업 예산 이런 데서 전용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산들 확보하기 참 어렵고 피해자들께서 눈물겹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재난 상황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재난 예산, 재난대응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되어 버림으로써 여기 사업에는 또 지장이 생겨 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예산 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된 얘기도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석유화

학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화력발전소—이번에 사고도 났었는데요—또 액화가스 이런 화학 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사실 예상하기도 힘든 데다가 태화강이 언제든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재난과 또 사회적 재난의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재난대응 종합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사실은 큰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장관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비단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을 하셔서 그런 선정된 지역에 재난대응 종합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면 아무래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초기 대응을 하고 피해액을 줄이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에 장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AI 기술을 이용한 재난대비 체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기관에 소재해 있는데요 그것을 AI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 단위에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재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상욱 위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경산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지연 위원** 어제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모든 일체의 정치적 외압, 어떤 형태의 외압 내가 다 막아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 있게 수사해라.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 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라’ 또 ‘법무부장관 직을 걸고서, 막아 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 이 당부 발언,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구체적으로 그 정확한 위당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 발언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법무부장관님께서 2016년에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당부한 말씀입니다.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께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이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는 말 그리고 이것은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신중히 검토하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2016년에, 9년 전에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님으로서 한 그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더라면, 그

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 검토가 일선 수사하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법무부장관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외압이라고 하고 있는, 외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현실이 정말 갑갑합니다.

장관께서 차관계 항소 제기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말씀하셨고 차관계서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전달하고 그런데 이 지시가, 이런 의견 전달이 정말 장관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느냐라고 볼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누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다수당, 집권당, 제1여당, 민주당 아닙니까? 헌법 개정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당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두려워 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지시한 적 없다. 항명한 적 없다’ 이러면서 왜 항명했다면서 검사 과면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무죄라면서 왜 재판 중지법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아, 정말 뭐가 있나?’,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초한 거는, 이 문제를 만든 거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관님이 책임지고 안 책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 정의가 멈춰 서는구나, 법 지킬 필요, 아무 소용없겠구나, 법 정의가 사라졌구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저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기 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나중에 돌고 돌아 보면 정권을 흔드는 큰 쓰나미로 돌아오더라고요. 장관께서 신중 검토가 아니라 장관님 직을 걸고서 막아 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걸 후회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 정의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이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지점만 해도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짧게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장관 취임해서도 그런 기초하에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월에 폐막을 했는데 APEC 계기로 대한민국과 경북의 문화들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 무형유산인 경산자인단오제라든지 자인계정들소리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북의 많은 무형유산들이, APEC 계기로 정말 많은 유산들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여기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 APEC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또 경북으로 오고 이렇게 후속 조치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철우 지사께서도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APEC 문화 전당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AI센터라든지 경북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포스트 APEC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렸고.

기재부차관님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지연 위원 이 부분도 문체부와 함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요 장관님, 계속 질문을 좀 드리면 국가무형유산 이걸 전승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전승자들, 보유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승을 할 수 있는 보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점점점점 고령에 지금 달하지 않을까? 제가 평균 연령을 통계를 내 보니까 한 75세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맥을 유지하고 국가무형유산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유산청장님도 계시겠지만 실제 주요 예산을 다 따져 보니까 이분들한테 뭔가를 공개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전승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 내역들을 보니까 총 한 56억 1000만 원 정도 남짓이에요. 이거 충분하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부족합니다.

○조지연 위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 잘 협조해서 예산 챙겨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APEC 계기에 문화유산이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체부 예산 중에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지원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회성이고 공연 횟수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보면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 가지고 체육관 증개축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산업부 산하에 보면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복합시설을 또 체육관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전혀 이런 전승 공연관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2023년도에 지방정부로 이관이 됐다고 하던데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와 좀 상의를 해서 가지고 이 사업들을 살리십시오. 이게 저희 지역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타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무형유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승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콘텐츠는 있는데 이걸 담을 그릇이 지금 없는 거니까 기재부랑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교육부차관님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지연 위원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도 서비스의 질이 정말 향상되어야 된다는 그 지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0세에서 2세, 영아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내년에 1 대 2로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그런 발표를 봤는데 가능한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내년 예산에는 0세 아동에 대해서 1 대 2로 조정을 하고 1세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지연 위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의 영유아도 보육의 대상이고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분들도 유보통합의 주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지금 장애로 등록된 영유아 수를 보니까 영아 기준으로는 1000명이 넘고 유아 기준으로는 2000명이 훌쩍 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뒤에 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지연 위원 장관님, 이것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히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 손이 많이 가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증원을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다가 아니고요.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영유아정책국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같이 관할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지연 위원 이것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육부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특수교육정책과가 따로 있는데요 영유아보육국하고 이 특수교육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담조직 설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부모님들께서 또 여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정말 문지방 닳도록 오셨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일도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지연 위원 예,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진실화해과거사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8월에 논의되다가 멈췄습니다. 제 법안의 취지는 진실규명, 피해 규명을 받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보상을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뒤서 이분들이 이 사건 들고 재판장에 안 가도록, 법원 소송비용 안 들도록 이렇게 해 달라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진화위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이념에 얽매어 가지고 진화위 구성에 대한 부분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이 공히 아마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분들을, 이분들 심지어 점점점점 고령이 돼 가지고 정말 얼굴 뵈기가 진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삶을 묶어 두고 진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국가적인 책무를 좀 저버리는 저는 그만큼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난 결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거사 사건이나 이런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려면 명확하게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

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법률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견 없는 거라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국방부차관님, 포항 초계기 사고 관련해서 어제 유가족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방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실에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주시 원도심 천주교 순교역사체험관 건립 예산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기획재정부도 좀 들어 주셔야 합니다.

장관님, 청주시 천주교 순교역사체험관 건립 예산 문체부 예산에 반영됐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종교 문화시설 건립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불용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강일 위원 교황께서 직접 방한하세요. 전 세계 청년 순례자들이 오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차관님도 들어 주세요.

2023년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가 150만 명 참석했었습니다.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자는 게 국정 과제입니다. 세계청년대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행사인 교구대회, 본 의원 지역구인 청주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아직 순례와 역사 체험을 진행할 거점시설이 청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순교역사체험관 사업이 마침 안성맞춤입니다. 대표적인 신유박해 순교터입니다. 당시 청주읍성 주위로 순교 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관 중심으로 K-선형 순례도 구상 중이고요. 문체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청주 원도심에 집단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체험관이 완공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체부장관님, 우리 부지가 확보된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정부에서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용 안 됩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지요. 서운동 순교역사체험관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소위 과정에서 필요성, 혹시 지역 간 형평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8월 오송참사 관련해서 총리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대로 조사하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도입해야 한다.

총리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하겠다고 그때 약속하셨고요. 행안부가 한 달 뒤에 오송 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시켜 줬습니다. 세심한 배려 그리고 존중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단 출범은 했지만 운영비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운영비 얼마 안 됩니다.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께서 요청하신 추모 공간 마련 예산도 미미하지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약물 치료 위주로 진행한 피해자 지원 방식 지금 바뀌야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지금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예산도 얼마간이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대화하고 이분들하고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외부의 2차 가해 그리고 길어지는 추모사업 논의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기왕 지원해 주실 거 좀 꼼꼼히 작은 것들 이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원단을 구성해서 매달 유족들과 또 생존자 여러분들을 함께 뵙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한 예산과 지원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 실장님, 지난 3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켰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집값 고의로 끌어올리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기구의 필요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주간 통계로 부동산정책 결정하는 나라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가 유일한 것 같은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월간이나 분기 단위로 주택가격지수 발표하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주간 부동산통계가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왜곡한다는 비판 이

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그런데 조사원이 호가나 매물 시세를 보고 통계를 산출하기도 하고요. 옆이나 다른 지역의 유사 단지 거래가나 호가를 적어 내기도 해서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계약만 했다가 취소하는 이런 불법행위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통계는 정책 입안이나 시장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허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동산 상시 감독기구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통계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이것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통계체제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법무부장관님, 오늘 또 법무부장관님께 할 게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이강일 위원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오랫동안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검사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거 이것 계속 문제가 되는 검찰청, 검찰권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불까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요. 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무리한 기소 반복된 것도 있습니다. 기소했지만 무죄가 난 사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사과 기소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이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검찰 권력 스스로가 정치화되고 결국은 내란수괴를 잉태하는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중요한 거 몇 가지 짚어 볼까요.

첫째, 범죄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하자는 겁니다. 불기소를 하려면 검사장 승인받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기소지연 방지 조항도 신설하자는 겁니다. 수사 종결 후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피해자나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기소독점에 법원의 통제를 좀 어느 정도 가하게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셋째, 공소취소제도 규정도 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공소를 취소하려면 법원의 허가과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거래나 사건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 여부가 검찰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구조에서 공정이나 신뢰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제 검찰의 기소권에서 투명성, 법적 통제장치 좀 필요하다.

장관님,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긍정적이신가요? 검토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입법정책적인 과제이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개시 또는 기소권들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권한을 나눠 갖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또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2일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공소청의 역할과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강일 위원**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아마 사무처장님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디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여기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사무처장님, 우리 헌법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이강일 위원** 입법,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국가권력으로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헌법을 어기면 헌재가 판단을 하는데요.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있다면 이걸 아무도 제어를 할 수 없네요?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헌법 통제의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제4심이 된다고 반대 입장이더군요. 그런데 헌재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이강일 위원** 재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재판이 헌법에 맞는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재판소원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절차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의 최고규범은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헌재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해야 합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신 아니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류를 헌법적으로 바로잡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재판소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으로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확실히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6일입니다. 장관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예방해서 친일재산귀속법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하는 10대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법사위 법안들입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10대 중점 법안이라고 해 갖고요 그 안에 친일재산 관계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친일재산 환수까지 지시하셨습니다. 법무부가 그 국정 철학에 이렇게 호응한 것,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일 청산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다. 누가 이 땅을 일본에 넘기려 했고 누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친일 청산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 아들과 딸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세대 전승하는 것이 친일 청산의 완성이다. 제가 국회에서 몇 번 강조했던 저의 입장이고 소신입니다.

장관님, 앞으로 추진 계획 어떻게습니까?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국회 법사위에, 제가 법사위원장님께도 이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법안 상정해 갖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친일재산 환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첫째, 소송전략 전면 재설계가 돼야 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가 관리 중인 미귀속 친일재산 이것 다 검토해서 전담반을 좀 구성해서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많은 소송이 장기화되고 기각됐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친일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엄청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둘째, 빠른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지금도 친일 후손들이 위장 매매, 증여, 상속, 명의

이전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세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무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올려 주시고, 법무부는 시행령 초안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법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방안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 조사위원회를 보면 말입니다. 활동 기간, 조사 범위, 부처 협력이 모두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합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의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재산 은폐와 세탁에 대응하는 조항을 좀 담았습니다. 법무부가 미리 운영 설계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시행령 공포 즉시 좀 파워풀하게 가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친일재산 환수 TF를 구성해서 이에 대해서 방안을 미리 실행계획까지 설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고요. 다만 저희 법무부 내에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준비를 다시 독촉할 것이고요.

2023년도 10월에 대법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저희들도 관련 사건들을 잘 점검해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매각한 그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최근에 제기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청주시의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제 고향인 진천군에서는 이 일을 술선 수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친일재산 환수는 그 과정 자체가 친일 청산이고 미래세대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조국을 팔아서 얻은 부로 친일 후손이 대대로 영화를 누리는 현실을 국가가 단죄하지 못한다면 반역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정의의 강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가 제일 앞에서, 일선에서 지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훈기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님,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과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에서 차관, 검찰국장인데 검찰 과장이라고 했는데 검찰과장은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계통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백신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장관과 차관이, 그 자리에서도 저는 차관에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게 6일 날 예결위 종합질의가 끝난 그 이후였습니다. 국회 법무부대기실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최초는.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강백신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로 대장동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검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홍상철 검사, 이들은 모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대장동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검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석은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 홍상철은 정영학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이와 관련해서 따로 감찰을 시작한 바는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강백신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호응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에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 올라가는 걸 앞장서서 막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사입니다.

장관님,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장동사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과 결탁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나 수사부나.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서 항소 포기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던 검찰이 지금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수사를 하고 이에 발각된 피의자들이 벌이는 위선적 작태입니다.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검사,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검사들의 중징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국회에 오면 저희들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국민권익위원장님, 내란수괴 윤석열의 절친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면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6일 권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린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게 올해 2월 맞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정확한 시점은 제가……

○**이훈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올 2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단 이틀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하던 짓 똑같습니다. 국면 전환용 몰타기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원래 2024년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재부는 당시 건보공단이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그래서 위반 금액 1443억, 그렇지만 거짓이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초과 인건비를 차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종결됐던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이슈화시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 다시 2월 달에 조사하고 보도자료를 낼 때 그쪽에서 조회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권익위원회로부터 기재부가 자료 요구를 받거나 협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 양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처리해서 무혐의 종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위원들의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린 거라고 보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에서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잘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일단 10월 20일 날짜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는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 있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기획재정부는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아닙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 제가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체부 소관 아리랑TV·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 법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그 법을 보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 문화 진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지 방송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고 방미통위 소속으로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면, 기재부가 만든 기금운용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2년 재정자율평가에서 예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관련 부처와 예산 이관을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고 2022년 예산정책처 결산에서는 ‘소관 불일치,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2024년 예산정책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전 이 문제는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 아리랑TV나 국악방송에 지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들이 매출액의 최고 6%를 내는 그 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들도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존 방송사들은 형평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상황이 어려운 지역 중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인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여러 지적도 있었으니까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로잡고, 저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도 문체부 일반회계로 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운용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로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방발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통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방식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형 평화거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 워싱턴DC의 평화연구소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처럼 우리도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특히 통일부에서 국민참여형 평화 플랫폼으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좀 확보됐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 있어서 적대적·공세적 정책수단으로 삼아서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 정부의 정체성과 노선에는 딱 맞는 사업이지만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 정부의 정체성 그리고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을 통해서 적대와 대결을 평화와 교류로 대전환을 이룬 이래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공존의 철학에 입각해서 평화공존센터의 건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건립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된 82억과 올해 불용된 50억이 있는데요, 그 연장에서 평화공존센터는 추가 부지 매입비용과 설계비 123억을 계상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무회의에도 보고드릴 바가 있습니다. 인권센터를 평화공존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관계 대결 프레임에서 평화관리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교류·평화공존 정책의 일관성 회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차관입니다.

○**이훈기 위원** 본 위원이 매주 금요일 날 ‘동네 한 바퀴’라는 걸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저희 지역구의 1개 동을 정해서 밤 10~11시까지 한 5~7시간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안전 우려, 책임감 때문에 안 하는데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을 통과시켜서 학교장에 대한 책임도 완화가 됐고 그리고 시설 지원도 할 수 있어서 이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하나 원하는 게 학생 수도 주니까 그 운동장을 지역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흙바닥보다는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환경문제로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특별교부세도 교육부에서 내려 주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올해부터 인조잔디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기 시작하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17년까지 하다가 유해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학교하고 시·도교육청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으로 조례로 많이 정하고 있고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서울에 29개교, 경기도에 20개교 해서 총 77개교에 374억을 인조잔디 까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당 한 5억 정도 돼요. 서울하고 경기,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천을 비롯해서 7개 시도는 전혀 이게 없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탈락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별교부금에 인조잔디가 교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도에 일괄적으로 알려 드렸고요. 7개 시도가 신청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이훈기 위원** 지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잘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교부금이 최근 3년 이내에 교부한 학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열악하고 손볼 것도 많은데 이 3년 제한 규정 때문에 여기에 묶여서 학교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힘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3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3년 제한 문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두고 있는 건데요. 오래된 학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장동 일대에 대한 항소 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왜 이 범죄집단에게 유리하게 범죄집단의 편을 들어 주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항소 포기 지시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했느냐, 법무부장관이 지시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지금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한 게 세 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직후에 보고를 받고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처음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건 보고의 일환으로 그냥 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두 번이네요. 11월 6일 날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 보고를 받고,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11월 7일에도 예결위 중에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충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중히 판단해라’ 그러면 항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할 때의 ‘판단’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문해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수사검사, 공판검사, 차장, 중앙지검장까지 다 항소하겠다는 의견이었고 대검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뭐……

○**박형수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월 6일, 분명히 장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1월 7일에 또 들었어요, 이 얘기를.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신중히 판단해서 11월 7일에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또 얘기를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지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박형수 위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시를 하신 장관님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6일 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7일에 다시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정말로 신중히 판단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시를 했더라면 ‘알았다’라고 끝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이 건에 관련해서 국민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관심도 많고?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하에서 판단하기를 바랐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랬으면 말씀하지 말았어야지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 아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시하거나 반대하거나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저는 늘 의견은 냈습니다. 제가 무죄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항소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 내면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항소되게 했

습니다, 장관 의견과 관계없이.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요. 다 대개 항소하게 하고 검찰 의견대로 하는데 왜 유독 이 사건만 신중히 판단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대통령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보고가 그렇게 와서 그랬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박형수 위원 보고가 오면 거기에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고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장관의 그런 의견에 관해 갖고, 과거의 관행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내부 회의를 할 때도……

○박형수 위원 사실상 기속이지요.

이 얘기도 지금 노만석 대행과 전달했다는 이진수 차관의 얘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노만석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이 전화를 해 가지고 세 가지 선택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세 가지 선택지가 다 항소 포기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진수 차관은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차관한테?

○법무부장관 정성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법무부차관은 저의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아니다.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님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는 그 문언에 따라서 중립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는 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와 진배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지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법무부장관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차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차관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한 겁니다. 이건 불법적인 수사지휘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당연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고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령상에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수사지휘인데 형식상으로는 수사지휘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일상적인 수사 건에 대한 의견 전달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법무부차관이 수사지휘 발동을 장관한테 요

청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진수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전 협의·조율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전 협의·조율은 할 수 있습니까? 현행 법률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조율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게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박형수 위원** 왜 이게 법령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검찰사무를 갖다가 지휘·감독할 책임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장관님,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 그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 구체적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구체적 사건인데요. 제가……

○**박형수 위원** 구체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총장을 통해서만 서면으로 지휘를 했어야지 차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것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협의 과정이라는 얘기는 말일 뿐이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되는 모든 사안에 관련해서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견을 공유해 갖고 거기에 대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 의견 낼 수 없습니다. 장관 의견 내면 안 됩니다.

장관님, 검찰청법 8조 왜 만들어 뒀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그런 지시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을 협의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그런 지휘 외에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그런 지시라든지 어떤 의견 전달에 사실 기속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 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보고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면 보고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전혀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고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사건 보고에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법으로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 의견은 법무부 내에서는 의견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검찰로 전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대검에서 법무

부에 사건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건 보고도 제가 보니까 매우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통보의 의미지 지시를 받기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통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권한과 책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하려고 하는데,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사실상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는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말씀하실 때 사퇴 의사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전히 그러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 갖고 그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 갖고서 제가 사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사퇴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찰개혁이나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관련자가 지금 법무부장관입니다. 차관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이었습니다.

특검은 어느 때 합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서 이 사안들, 각자가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 여부와 관련해 갖고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 여부는 국회의 결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같은 취지입니다. 어쨌든……

○박형수 위원 저는 오히려 장관님은, 정말로 장관님 말씀대로 명명백백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특검 하든지 국정조사 하든지 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환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

니다. 장관님께서도 민사소송으로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사상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잖아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의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형수 위원** 그런데 형사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 버린 겁니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민사소송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면적으로 추정 관련한 부분이 번복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형수 위원**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이것은 추정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추정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 1심 판단에 법원 판단은 달리했어요. 2심에는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3심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항소를 함으로써 그것을 다 뒤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날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든 법무부장관이든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아시는 것처럼 추정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몰수·추정해서 안 됩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의 단서 조항 때문에 했지만 이미 저는 민사……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건 순서가 거꾸로지요. 일단 몰수·추정을 해서 부패재산 환수에 따라서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물론 그것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민사소송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청구취지 확장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형사판결만 보는데……

○**박형수 위원** 장관님, 지금 범죄수익이 7000억, 8000억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 검찰이 추정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이천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00억은 이 사람들이 다 썼든지 어디 숨겨 났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수십 년 동안 이걸 추적해 갖고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어요. 추정 판결을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을 내팽개쳐 놓고는 지금 장관님이 민사소송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일단 1심보다도 중형들이 선고된, 핵심 피고인들은 중형이 다 선고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중형 선고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들이 더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부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박형수 위원 이 사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무죄판결이 있었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추정할 수 없게 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중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검사를 하면서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항소 안 해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근에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그것이 무죄판결로 인해 가지고, 명백한 무죄판결인데 계속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시는 부분 때문에 항소를 자제하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다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항소심까지는 통상 판결을 받아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는 경우는 많지만 항소심 판결까지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다뤄 볼 기회마저도 없애 버린다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사실 자체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대개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박형수 위원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사실심 판결은, 사실이 확정되는 건 항소심 판결까지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 이유를 봤을 때 개발업자들과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과의 어떤 결탁 관계는 그것은 정리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박형수 위원 그게 정리됐다고 해 갖고 판결 다 끝난 겁니까, 무죄판결된 사람도 있고 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항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말 맞춰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항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해 놓고 계속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의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요. 범죄수익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양형 관련한 그 과

정에서 보다 더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입증하면, 이게 무죄가 선고돼 환수 안 해 버리는데 입증하면 뭐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양형의 문제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주장을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 위원 서왕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기는 합시다만 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어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전국의 18명 검사장 등 집단성명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검찰총장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사의 표명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편파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휘두르며 사실상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 핵심 책임자들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흠집 내고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보겠다는 그런 집단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 운운하면서 이 사태에 공개적으로 가세한 것은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과거 검사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서 본인의 과오를 덮고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잔기술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내면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고요. 또 주가조작 전주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검찰이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검찰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의 전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부 구성원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이 물론 주장하는 바야 좀 다르겠지만 항소 포기에 관련된 것인데 개별 사건의 항소 포기의 적정성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고 검찰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징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행정공무원 중에 징계와 관련해서 별도 법률로 징계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집단항명으로 사실상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해도 그동안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준 이유는 사실상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물론 수사기능이 꼭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건지라는 의문이 좀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습니다.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주 편의적인 어떤 자기들의 행위를 보장해 주는 어떤 악법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재판의 본질은 이번 항소 포기 문제가 아니고 대선후보였던 제1야당의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권력을 동원한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자살 운운하면서 검찰권의 수호자인 양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그런 발언도 했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야말로 특수부 황태자로서 윤석열과 함께 극단적인 검찰권 오남용 행위를 주도해서 검찰을 무덤에 파묻은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언론인 또 노동자, 시민, 공무원, 정치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그 재판과 기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또 피해회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조

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검사장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이 법에 따르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될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당 인물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법 제정 취지에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기반으로 해 갖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 갖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갖고 부당한 기소를 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말씀들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는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항소 포기 논란이 아니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다시 정치검찰의 권력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이 검찰의 명예를 앞세워서 조직적 반발을 일으키는 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 명확한 대응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다음은 국무조정실 2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2차장 나와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통합돌봄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생현안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또 장애, 의료위험시대의 핵심과제인 통합돌봄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의 돌봄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만 하고 있고 또 복지기관에서는 개별 서비스, 행정은 서류행위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사실상 아직까지 가족이 이 모든 짐을 떠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행히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작이 되는데요. 2018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7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경험을 축적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부의 현재 예산안은 이 제도를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현재 예산이 내년도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777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내년도에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국적 확대를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정부안에는 전체 229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역인 46곳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말이 상위 20%지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제외된 46개 지자체도 내년에는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한 717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복지위 상임위에서는 12일에 전체회의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그러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여기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통합하고 함께 진행하는 데 전체적인 통합 조정 기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예산 증액을 통해서 빠진 46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런 예산 증액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이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인력 문제입니다. 항상 인력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때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될 거냐 하는 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 중인데 대략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 본격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한 7000~7200명 정도가 추가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연구에서는 잠정 추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계획에는 추가 인력 수를 2400명 정도로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최소한의 적정 전담인력 7200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단체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46개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850개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 3551개 읍면동에 부족한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등을 제대로 충원하려면 최소 325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전국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기왕에 있던 인력들이 쪼개기를 해서 그 일에 다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이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에 있었던 복지공무원 사회 비극이라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또 재현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복지사업은 행정은 굉장히 급증하는데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시에 격무에 시달리던 복지공무원 다섯 명이 연이어 자살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인력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는 인력 확충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사회복지직, 간호직 중에 현재 민간 인력으로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지금 하여간 걱정인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부처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참

여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행안부 등과 그런 협의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협의도 잘 해 주시고 또 당장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 인력들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할지 하는 부분도 투트랙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습니다마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다 짊어졌던 이 짐을 국가가 대신해서 한 사람의 일상을 제대로 지탱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요양원에 그냥 방치되거나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곳에서 제대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도 시행할 때 너무 혼란하지 않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관련돼 있는 여러 부처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 부분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복지부하고 협력해서 기재부나 행안부를 잘 설득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재난안전 예산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나 기후위기 또 사회재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굉장히 큰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안전 인프라 예산과 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긴급 복구, 보험 보상 등 안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올해 행안부 재난안전 예산이 약 2조 5000억 원으로 마련된 걸로 현재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첨단기술 기반의 어떤 사업의 확대가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재난안전 관리 R&D 증가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런 걸 위한 적극적인 확장 편성을 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거나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사람보다 너무 시스템 쪽에 치중돼 있는 것 아닌가 또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책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구별을 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자산 취득 중심의 예산편성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주로 치안시설 또 재난 R&D, AI 관제 이런 자산 취득성 사업이나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예산의 큰 비중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유지관리비 부담도 크고 집행 비용도 상당히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문가들의 지적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범죄나 재난 등 관련 예산이 복구 중심에 너무 치우쳐 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재난이나 피해 부분을 복구하는 쪽의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커서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일상 치안 활동 같은 경우에 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

런 지적이 있고요. 또 예방 교육 또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이 정채되거나 축소될 우려까지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롭게 R&D나 정보화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또 중복 투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치안·통신망 이런 유사 목적 사업 간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런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난 관련 산업 진흥과 R&D 투자를 늘린 부분은 보다 성과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구 중심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복구비, 그러니까 이왕에 일어난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 예산이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예방 예산도 재해 복구 예산에 거의 비등한 규모로 편성이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의 곽상언 위원님.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기석에서 미리미리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장시간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국가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또 그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힘들고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해마다 교수신문에 보면 교수님들이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정부의 시기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맞춰 보시는 분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나섰습니다. 사악함을 깨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짐은 무거웠고 책임은 컸습니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비판에 대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로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부의 시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뜻밖에도 민주당 정부였

던 문제인 정부 시기입니다. 2017년의 사자성어입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2018년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2019년 공명지조(共命之鳥), 원래 새가 서로 울음이 통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2021년 묘서동처(貓鼠同處), 고양이와 쥐가 한곳에 산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내년에는 꼭 발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또 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권력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순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겼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지도자가 어리석고 무도해서 세상이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이 화가 나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때 권력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기겠습니까? 혹 기억나십니까? 박근혜정부 시기였습니다. 2013년입니다. 도행역시(倒行逆施),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유명한 지록위마가 2014년이었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2015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탓에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 군주민수(君舟民水), 드디어 민의 바다가 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84년 8월입니다. 1984년 8월에 서울, 경기, 충청도 일원에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서울에 계신 분들, 경기도에 계신 분들,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홍수를 다 겪었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였고 이 홍수 때문에 저희 집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한강대교 등 무려 4개의 교량이 차량통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실종한 사람만 190명이 됐습니다. 이재민만 3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수해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 5만t, 시멘트가 오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해였습니다. 이때의 지원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간 물자 교류를 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홍수 피해 상황인데요.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해마다 최고기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겨울에는 추워서, 마찬가지로 생활고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아픈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혹은 국가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아서 홍수 피해로 나날이 피해는 커져 갑니다. 이런 국가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4~2023년까지 서울시의 피해액만입니다. 대략 76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22년 한 해에만 70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 합니다. 전체 피해액의 93%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2022년 8월에 강남역 일대에

홍수가 납니다. 아마 그때 강남역에 계셨던 분들은 집에 못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것 보시면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홍수 피해로 도로가 마비되는 것을 넘어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피해가 극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입니다. 한자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수(雨水)’ 빗물이 내릴 때 ‘유출(流出)’ 흘러내리는 것을 ‘저감(低減)’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들이 어디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곳 여의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그때도 대규모 홍수가 났었고 오목교가 범람해서 지금 CBS가 있는 근처는 모두 다 물바다였습니다. 그때 물바다였는데 지금 CBS 앞에 있는 안양천 앞에 우수시설을 대규모 설치합니다. 대규모 설치한 이후에 그곳에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주가 됐고 그 이후로 땅값도 많이 상승하고 많은 분들이 부를 창출했습니다. 단순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홍수 피해를 예방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 설치를 하는 예산은 단순히 빗물 피해를 줄이자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2024년 결산회계를 보니까 대략 70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처음에 606억 원이었다가 445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내년 예산안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400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4%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사업의 중요성을 보거나 해마다 기후변화를 보거나 홍수 피해 등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업액이 증가해야 될 것 같고 집행도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사업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작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작년…… 올해지요, 올해 본예산 445억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463억 이렇게 해서 9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이월액이 약 180억 정도가 예상돼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4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도도 집행하지 못한 액이 있고 올해도 집행하지 못한 액이 있고 그래서 그 불용액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월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 말씀입니다. 사업은 필요하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 사업도 실적이 어떤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 속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보기 전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입니다. 올해가 2025년도니까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715억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306억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이 42%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몇 곳이 진행되고 있느냐? 27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곳이 그동안 우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됐겠지요. 그러면 설치하기로 했고 그다음

에 집행을 하려면 그것이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만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까 27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20곳이 여전히 호우피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 신영동이 있습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넘어가면 있는 동네지요. 그쪽에 가시면 지금 서울 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지하에 저류시설, 우수를 채워 두는 저류시설을 설비하기로 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비만 집행을 했고 아직 설계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앞의 신영동삼거리에 빗물이 터지고 도로가 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업 지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수저류시설이 도심에, 그러니까 시가지 지역으로 들어오면 지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 저류조를 만들 때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시설의 피해 현황을 알게 되면 당연히 동의해 주실 거고요.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알고 나면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영동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곽상언 위원** 사업 진행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간석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류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류시설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서 그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남동구 구월동·간석동 등에서 무려 15건 이상 도로,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시설만 제대로 완공이 되었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위기는 환경위기가 생활위기로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생존위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곽상언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집행률, 아까 예산이 계속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집행률이 낮다는 기준을 제가 50%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인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곽상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좀 독려해 주시고, 특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홍수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큰 문제니까 그 현황을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책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주민 설득을,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설득 과정을 전제해서 사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방식을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80%까지 되었고 그래서 이월액이 200억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률이 왜 낮은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업의 기본 구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국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습 호우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조금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호우가 빈발되거나 한 번 발생을 했거나 하는 지역에서는 국비 지원의 상향을 조금 높이든지 아니면 아예 전액을 지원해서 재난으로부터 예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것을……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재난이 거듭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나 또 지역주민의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셔서요. 특히 대도시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수유출시설 현황 그리고 피해 횟수 현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사례인데요.

부산 수영구를 보니까 부산 인근에서 피해가 1건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 다음에는 그런 홍수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부산 동래구에 온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시설은 있는데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수가 났는데, 홍수 피해가 났다고 보도가 많이 났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가동된 실적도 없고 피해 보고를 받은 실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홍수가 났지만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실제 이미 설치된 지역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런 관리 예산까지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류시설이 완공되었는데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홍수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재정 지원을 내세워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창원시로 묶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통합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은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통합의 약속은 사라지고 불이익만 남았다는 게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고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은 진짜 구청, 자치구가 아니라 시청 아래 있는 부서, 행정구로 되어 있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통합의 결과가 정부 제도에서 배제되는 통합의 역차별로 돌아온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지요. 이게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산은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요한 통합의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등을 기준…… 그런 다양한 지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실 테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허성무 위원** 정부가 정한 그 기준만 놓고 보면 마산은 이미 인구감소지역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여 주실까요?

창원 통합될 때 통합 창원시, 지금은 창원특례시인데요. 인구는 2010년 당시 108만 명에서 지금 통합하고 15년 만에 99만 명으로 9만 명이 줄었습니다. 마산 역시 2010년에 40만 명에서 지금 25년 35만 명으로 통합 이후 5만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1990년과 비교하면 14만 명이 줄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마산의 65세 인구는 2010년 4만 2000명에서 지금 25년 9만 1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할 때는 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이 다 됐거든요,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행안부가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5년간 마산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정주 사업 보조금 지원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2항 개정을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구의원인 최형두 위원님도 지금 나와 계신데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이것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게 지금 시군구 단위로, 그러니까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에 첫 지정이 이루어져서요 22년부터 내년 26년까지 5년간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에 대한 예산 정책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 5년간 지원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새로 지정을 할 때 새로운 기준과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통합에 의해서 기존의 자치구가 행정구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장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이주 외국인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260만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허성무 위원** 인구 20명 중의 1명이 이미 이주민들입니다. 대구보다 더 큰 광역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 들어 있는 거나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들과 공존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지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남 창원시의 MAMF라는 축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과 지역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민간형 사회통합 축제인데요, 1년에 행사 때 한 30만 명이 옵니다. 주로 전국의 이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대사님이나 총영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심지어는 본국에 계신 노동이나 인권, 취업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장관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축제가 정말 지난 15년간 잘돼 왔고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예산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가끔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면 어떨 때는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원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 부서에서 진짜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유네스코에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미 와서 보고 가고 또 심지

어 이 행사를 기획했던, 맨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이 국가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최교진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허성무 위원 장관님 정말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고맙습니다.

○허성무 위원 전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비근무자가 7만 8900명, 약 8만 명 정도 되고 전체의 50%가 조금 넘습니다. 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허성무 위원 이분들이 방학 두 달 동안은 노동에서 배제가 되니까 기본급이 제로고 명절수당 정도의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오랜 요구가 방학 두 달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도교육청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반쯤은 교육부가 부담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공무직노조 대표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교섭 진행 중이고 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요 쟁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자고 일단 뜻을 모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교육부가 조금만 나서 주시면 될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학교예술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럼 하나 보여 주시지요.

2023년에는 95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올해는 428억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수업이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수업을 담당했던 예술강사님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강국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 복원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저게 문체부에서 일전에 지원해서……

○허성무 위원 문체부로 가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니, 지원해서 실제로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입었던 사업이고 특히 시골지역에 있는 소외된 학생들에게 굉장히 귀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서 예술강사들의 생활도 문제지만 예술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저건 문체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문체부장관님, 같이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사업은 현장에서도 너무 잘 진행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학교 관련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한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국고를 줄이고 이전을 시켰는데 국고를 줄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이것을 받쳐 주지 못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 쪽과도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국고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지난 정부를 굳이 탓하려 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 100조 가까운 세수결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엄청나게 줄었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도 줄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들도 상당히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복원된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 긍정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 또 RISE 사업, 저도 이 사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보면 이 사업이 과거에는 교육부가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을 통해서 각 대학에 예산을 뿌려 주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럼 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넘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자체 내에 RISE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교육부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내려 줄 때는 이것이 출연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받은 돈으로만 쓰면 되고 또 그게 정산도 좀 편리하고 그런데, 보조금이 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20%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내내 교육청에 내려 주는 교육보조금을 깎아 버렸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 보조금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돼서 지방교육청들이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이게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서 지역에 필요한 핵심 성장산업도 기르고 지역인재도 양성하고 대학과 연구기능이 실질적으로 지역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그래서 위원회도 같이 꾸려서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취지는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아하고 찬성하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통제기능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방의회의 통제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늘어나고 돈은 추가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동안의 재정상황은 악화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보면 이 성과평가 중에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하고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같은 경우는 15%라서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년 단기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물론 단기도 해야 되지만 3년·5년·10년 단위의 이 사업이 정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왜 그런가 하면 취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6개월, 1년을 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다 그것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꼭 필요한 것을 대학이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지역 산업과 대학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기준에 정주 취업 증가율 그리고 대학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한 평가의 연도, 주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실제로 부담이 되기보다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이시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여쭙나……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게요.

장관님, 헌법준중 TF, 이른바 공직자사회의 내란 TF,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논의

가 있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난 국무회의에서……

○조은희 위원 아니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지시하시기 전에 사전에 공유된 바 있으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전에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 안에 대한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총리실에서 1차 준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요, 장관님이 구체적 안을 받으셨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구체적 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공직자들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신데 사전에 모르셨고 지금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중앙정부 공무원 전체를 관할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

○조은희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관할하고 계신데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고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국무총리실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 파악은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조은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12월 3일 내란을 전후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내란 모의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던……

○조은희 위원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던 공무원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냥 뭐 말 한마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러면 총리실에서, 언론 보도대로 투서나 음해성 제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제보할 수도 있는데 제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식의 어떤 수사나……

○조은희 위원 그러면 각 부처에 있는 헌법준중 TF는 어떻게 정당성을 갖고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투서가 오고 이럴 때, 공직사회는 투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승진하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기준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테면 사석에서 그냥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발언하는 이런 정도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지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에 따르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

○조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한밤중에 계엄이 이루어졌고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그 조사 자체도 지금 기준이 없고요.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만 이것은……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정부 여당, 대통령과 총리—장관님은 모르셨다니까—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유죄 추정을 하고 각종 회의 서면자료, 개인 PC·휴대전화까지 모두 뒤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를 보는 시민들은 가짜뉴스인 줄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와 같은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고요. 모든 공직자가……

○조은희 위원 그러면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 내거나 이런 것을 안 할 때는 강제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도가 전부 가짜뉴스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발적으로 포장한다는 것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낸다, 그게 자발적이라는 포장……

지금 정성호 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전부 항소하겠습니다’ 하니까 ‘신중히 검토하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항소하겠습니다’ 하니까 ‘신중히 검토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신중히 검토하세요’ 두 번이나 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부처 내에서……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좀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듣는 분은요, 노만석 대행은 ‘이것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랬잖아요. 조폭들이 밤에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하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무부장관……

○조은희 위원 그런데 신중히 검토하라 그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문서로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장관님, 제 질문을 좀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문서도 아닌데 그것에 따르는 검찰이 부족한 것이지요.

○조은희 위원 그런 것처럼 장관님이 ‘자발적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발적으로 휴대폰 내라는 거다’ 이렇게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발적으로 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은희 위원 그러면 뭘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감사를 할 경우 구체적인 단서 없이 휴대폰을 건어서 내용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구체적인 단서 없이 휴대폰 제출을 받아서 하는 감사가……

○조은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있다, 없음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은희 위원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제가 장관이 된 지 몇 달 안 돼서요.

○조은희 위원 아니, 행안부장관께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공무원 감사를 할 경우 구체적 단서 없이 휴대폰 걸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행안부장관은 ‘그런 것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조은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다시 여쭙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

○조은희 위원 없잖아요. 동의를 못 하십니까?

장관님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다는 뜻으로 오해되는데요. 장관님,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18조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 감사를 할 경우 구체적 단서 없이 휴대폰을 걸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지금 세 번째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은희 위원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데 ‘과거 정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없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3년, 4년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요, 앞으로 지금 감사를, TF를 하신다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습니까?

다시 한번 네 번째 묻겠습니다.

헌법준중 TF에서 공무원 감사를 할 경우에 구체적 단서 없이 휴대폰을 걸어서 내용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어렵습니다.

○조은희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돌려돌려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지금 ‘동의 없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의 없이’가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 말씀이랑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동의를 자발적으로 하면 휴대폰 걸어서 볼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자발적으로 너 이것 안 내면 앞으로 이게 포렌식도 하고 이럴 텐데, 조직 내에서 앞으로 내가 계속 인사 할 텐데 인사 할 때 불이익하고 너 승진에서 배제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드러나면 너는 수사 의뢰할 거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금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아주 은근히 휴대폰 내라는 것으로…… 동의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는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안 내면 너는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유추가 된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좀 클리어하게 해 주시면 좋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위원님, 국조실에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은희 위원**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제2차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국무조정실에 여쭙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100여 명 구형한 게 전부 10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교체를 했잖아요.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우려합니다. 공무원들은 일하면 안 된다, 무조건 복지부동,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발적으로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복지부동 그리고 약간 완장 찬 느낌, 그래서 숙청을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예체능계 전반에 걸쳐 입시비리 의혹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은희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인사청문회 때 조국 입시비리를 옹호한 과거의 옛날 발언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못 살렸다고 거듭 사과도 하셨는데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은희 위원** 그렇다면 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입시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니엘예고 여학생 3명이 나란히 비극적 선택을 한 걸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은희 위원** 며칠 전에도요 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땡땡땡 교수를 고발합니다. 전국 각지에 제자 출신의 예고 교사 또는 예고 강사를 통해서 뇌물을 자신에게 바

치는 입시생들을 물색해 콘택트하는 구조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연 예산은 자기 멋대로 유용하고 입시에서 자신이 뽑은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성적도 잘 주고 해외 공연 데리고 다닌다.

장관님, 대학교수를 정점으로 예고 교사, 학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이 거미줄처럼 펼쳐 있다. 그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비극이 브니엘예고 학생들의 자살이네요.

이렇게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감 때 한예종 교수들이 검직 승인과 외부 강의 승인도 없이 예고 강의를 나가고 심사를 한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지금 카르텔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의를 드려서 지금 장관님께서 특별 감사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데요. 저는 교육부장관님도 문체부장관님하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교육부 소관인 서울시 내 6개 예고 학생들이 모두 실력대로 평가받아서 한예종이나 다른 데 예술과에 입시를 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산하 6개 예고 외부 심사위원 내역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선화예고, 덕원예고 경우에 각종 중간·기말 실기고사 또 마스터클래스 강의에 현직 대학교수들이 나가서 콘택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리 콘택트예요. 특히 선화예고는 5년간 이런 횡수가 151건, 덕원예고는 81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들이 예고를 방문해서 커넥션이 생기고 카르텔이 생기는 이 관행을 문체부장관님과 교육부장관님이 협조해서 더 이상 학생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이렇게 불공평하게 출발하지 않도록 비리를 근절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혹시 의원실에 제보받은 것을 저희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공유……

○**조은희 위원** 장관님, 조사하고 계시지요,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교육부장관 최고진** 공조해서 그런 일에 연관되는 학교가 있거나 하면 철저하게 감사 이상의 일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두 장관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 보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또 월남 참전유공자분의 오랜 숙원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와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입니다.

현재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45만 원인데 내년에는 48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48만 원인데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많이 적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광복회장에게 광복회 선양 행사 지원비 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신 것 보고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

적 보훈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데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삭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10만 원 신설을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조은희 위원 저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다, 아쉬움이 많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에는 1조 1500억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10만 원씩, 그것도 배우자 생계지원금 10만 원 주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장관님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현실화하고 병급규제를 철폐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의료 혜택 부여 또 유공자 사망 후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에 대한 특별보상 지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망인 배우자가 1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 나이도 75세, 70세로 낮춰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받는 48만 원 참전유공수당 이 문제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승계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현재 재정 형편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가보훈부에서는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예산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해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앞선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께서 최근 항소 포기로 일컬어지는 사건과 관

런해서 ‘검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부당성을 강조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확산될 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극히 일부의 선동이 깔려 있고 또 일부 언론, 일부 극우 정치세력의 준동이 이어질 뿐이지 일반적인 검사들로까지 확산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재권자가 누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칙적으로는 중앙지검장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님께서 몇 차례 보고를 받고 한 번 정도 신중한 판단을 말씀하셨다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사실, 물론 저의 생각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주장을, 제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 왔기 때문에 장관 취임 후에도 그런 입장이었고. 매일 사건 보고를 받지만, 물론 사건 보고받고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그건 보고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입장들을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 관련해서 실제로 일선 청에서 ‘야, 이런 걸 항소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해도 대부분 그냥 그런 거에 관계없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사건 보고 올라오는 것도 모든 사건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하는 자체 판단한 사건들이 일부 올라오는데요. 또 많은 사건 경우는 대개 보고 없이 또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장관께서는 지금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징계도 포함되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에서 일반 민생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또 일부 검사들이 과거에 검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했을 때 그런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소위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주관적 의견을 피력하는 건데 다만 그런 의견의 피력도 조직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로 표출하고 여럿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맥락이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이 과정에서 검찰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공직 사회의 내란 가담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키로 했지요.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이 부분도 다뤄집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어쨌든 범위가

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관련해서는 나온 바는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TF가 내란하고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한정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 느낌에는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든가 그런 정도는 범죄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란이라든가 또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동의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구체적 언행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께서는 내란의 연장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TF의 가동 목적과는 별개로 보신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당시 어떤 상황하에서 그게 결정이 됐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아시는 대로 어쨌든 내란 혐의를 받고,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정말 우리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서 석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를 언급드린 것은, 이번 항소 포기 상황을 얘기할 때 지금 앞서서 나서고 있는 그런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일부 정치검사들, 이번 사태에 앞장서고 있는 극히 일부의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고 사실상 정치집단화돼 있는 자들입니다.

면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재익 수원지검장, 어떤 사건을 맡았던 검사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남 국제마피아파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지금 현역 의원입니다—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벌금 9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밑이에요. 그랬더니 항소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검사들이 지금 들고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연기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현철 광주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다음 보시겠습니다.

박영빈 인천지검장, 오송 지하철도 참사 사건 담당했어요. 충북지사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질타하는데 불기소했습니다.

서정민 대전지검장,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 경찰의 CCTV가 흘러 나갔는데 수사 중지해 버렸어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나경원 의원의 아들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유도운 울산지검장, 채 해병 사망 사건 1년 동안 쥐고 있었어요.

박혁수 대구지검장,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했습니다.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검사들이 다수입니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 탈북어민 북송 사건.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윤석열의 장모,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한 검사예요.

이들이 정의의 지웃 자도 꺼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예결위장에서도 이 사건 가지고 우리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예산과 무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계신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중요한 인사조치가 좀 있으셔서 기조실장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차관도 안 나오시고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장관님 곧 오실 겁니다.

○노종면 위원 장관님 오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노종면 위원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한 1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러면 끝나는데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죄송합니다.

○노종면 위원 먼저 일단…… 혹시 5분 내에 오실지 모르니까.

최휘영 문체부장관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1200개가 넘더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숫자를 세어 봤더니 스물세 곳이에요. 글로벌축제가 세 곳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스물다섯 곳입니다. 스물여덟 곳이 지금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축제들을 보니까 상당수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또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K-컬처, 이 K-컬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축제들은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무대, 참 만나기 힘든 무대들, 거기서 전통문화와 우리 국민이 만나는 장, 저는 그렇게 지역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를 보니까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표현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축제가 25개인데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1200여 개 가운데 25개로 선정이 되면 장관님,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3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3200만 원, 예.

○노종면 위원 글로벌축제라고 전국의 세 곳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천의 펜타포트 또 산천어축제 그리고 수원화성 이렇게 세 곳이 지원을 받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노종면 위원** 여기가 그나마 8억씩.

그런데 올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문체부의 입장이 하나 있더군요. 글로벌축제를 세 곳 더 선정한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내년엔 세 곳을 더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총 여섯 곳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노종면 위원** 이렇게 글로벌축제를 그 정도 늘리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고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K-컬처 때문에 외래관광객이 늘고 있고요 대부분이 수도권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축제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서 남들도 하니까 다 하는 축제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데 모두 다 지원하자가 아니라 글로벌축제로 키워서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K-컬처의 자부심도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그런 정책 이걸 기대하는 것인데 글로벌축제는 늘린다고 해도 아마 한 자리 숫자로 그렇게 늘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형 축제, 전국의 스물다섯 곳이 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정말 쥐꼬리만큼이지만 3000만 원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토대가 조금 더 탄탄하게 갖춰질 때 그때 글로벌축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 우리 정부의 축제 지원이 특정한 대표적인 축제 몇 군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축제들을 좀 더 넓게 발굴해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지원되는 것이 모두가 다 글로벌축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축제가 돼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화관광형 축제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짧게 부평, 제가 지역구가 인천 부평인데요 전국에 아마 우리 부평과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예요. 인천 부평에서는 30년째 풍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평구에 동이 22개가 있거든요. 모든동에 풍물단이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자치단체일 겁니다.

이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30년 동안 풍물단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스스로 십시일반해서 근근이 이어 오고 있습니다, 명맥을. 지금은 학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중학교에도 풍물단을 늘려 가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관심, 전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문체부가 관심을 갖고 발굴해 내지 않으면 우리 정부 어느 파트가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새 안규백 장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짧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쭙볼게요.

반환받은 미군기지 문제, 원주의 캠프롱, 국방부랑 원주시가 소송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국방부가 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캠프마켓.

○노종면 위원 이것도 인천시와 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항소 포기를 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핵심이 반환된 토지를 지자체가 결국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가격의 기준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요, 시점을.

○노종면 위원 국방부는 이 두 소송에서 결국 패소를 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지자체가 사 가는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땅값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반환 시점……

○노종면 위원 아니지요. 반환 시점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거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 국방부가 반환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지자체가 그것을 사들이면 시가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 국방부는 ‘아니다, 지자체가 사 가는 그때 시점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소송 두 번 다 졌는데 국방부 입장 안 바뀔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는 그동안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 주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답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노종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미반환 기지가 일곱 곳이에요. 그렇지요? 더 되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기존대로 유지되면 갈등이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쓸데없이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그래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발의를 하였고 저도 오늘 발의를 한 것이…… 지금 국방부가 좀 딜레마랄까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국유재산법 44조 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여기에 보면 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 부분은 약간 좀 국가유산법 개정과 또 주특회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주민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군기지에 땅을 내준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주민들이 이제는 늦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득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먼저 2026년 국방부 예산편성이 8.2% 증액을 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대폭적으로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 예산소위 심사도 이틀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중에 수천억 원을 국방부가 스스로 감액 요청을 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소요 제기에 대비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글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전력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인건비에 관련된 거예요. 부사관 인건비 650억 원, 군무원 인건비 554억 원, 건강보험 부담금 251억 원, 이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국방부에서는 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도 뭐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까지는 내용을……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처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면 깎고 이렇게 통제하는 게 기재부인데 지금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돈을 몇

천억을 국방부에 더 준 겁니다. 국방부는 필요 없다고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반면에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예산은 반영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년간 우리 군 간부들의 숙원이었던 당직 근무비 인상, 그걸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무원 수준으로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290억 정도 됩니다. 그걸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사화물 지원, 이것도 당연히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262억인데 이걸 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아마 답변하기에 제한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군 배상금 관련해서 이게 참 문제가 많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워낙 예산편성이 적다 보니까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 왔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계속 그런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임종득 위원 올해 2026년 예산안도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최초로 70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의 승인은 200억 원이 났고 그 200억 원은 지난 3년간 계속했던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사 소송은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 배상금 지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20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1495억 원까지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방부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국방부장관 안규백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배상금이라는 게 미리 책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현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게 예산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는 민원인한테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연 12%의 고이율의 이자까지 물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과거의 3년 치 200억 달러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좀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이 내용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랑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당직 근무비 인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위원 막론하고 군인 처우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건의를 해 왔던 거 맞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실 다른 동일 직급, 동일 직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반 직렬 수준으로 인상을 계속 요구했던 바인데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도 국방위원으로 계시면서 저와 같이 입을 맞춰서 이걸 강조를 했었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장관님으로 가서 가지고 2026년도 예산에는 이거는 해결되겠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8.2% 국방비가 증액이 되니까, 8.2%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기 2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정부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시다. 그렇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요, 장관님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2만 원, 4만 원에서 3만 원, 6만 원으로 약간 인상은 됐습시다마는 그래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열정페이로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종득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국방부에서 스스로 삭감하겠다는 예산만 하더라도 수천억이예요, 제가 소위 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것 반영하는데 29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공무원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인건비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재정부하고 국방부가 한 번 더 숫자를 맞춰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군 당직비하고 관련해서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당직비가 또 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여기 증액 노력을 했고요. 또 군의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 들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 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한테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올해 8월부터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당직근무비가 바뀌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3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이것 장관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군인하고 현역하고 차등이 있다 이 런 말씀……

○임종득 위원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면……

○임종득 위원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차등은 당연히 있어 왔던 거고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군인한테는 10만 원을 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근무하는, 일선에 근무하는 군인한테는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3만 원 주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당직 근무여건은요, 제가 국방 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봤습니다. 국방부가 훨씬 좋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국방부에 근무한다고 더 받는 모습을 보는 일선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처신 자체가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예,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은 어디서 근무하나 그 근무여건과 복무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다 똑같이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 습니다.

○임종득 위원 예, 그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병무청장님, 오셨나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여기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병무청의 정보보호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종득 위원**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실제로 행안부장관님한테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병무청의 정보보호팀이 상시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부터 폐지될 위치에 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예, 내년 상반기까지 기한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상시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종득 위원** 행안부장관님, 이것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한시조직이라고 해서요, 한시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3년 단위로 한시조직은 설치하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를 좀 하면서. 그전부터 필요했었는데 상시조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연장하려고,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해체는 아니고요.

○**임종득 위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보유한 정보 데이터가 102억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병역판정검사 자료, 현역·보충역 입영·소집 자료, 복무했던 모든 자료들, 이런 기밀이 요구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직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시조직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서……

○**임종득 위원** 전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요? 그 조직은 없어지면 다른 데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연장도 행안부에서 허락을 해 주면 연장할 수 있지만……

○**임종득 위원** 행안부에서 허락을 해 주면 된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계속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종득 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청의 경우에, 청단위에서 정보보호팀 또는 정보보호담당관을 운영하는 데가 세 곳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그 정도로 파악했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훈부장관님!

보훈부장관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6일 현충일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말씀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말씀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도 저한테 그때 영주 행사할 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종득 위원 특별한 희생이 뭘 의미하는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결과적으로 이 국가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나가서 생명을 잃었거나 부상을 많이 당했거나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국제보훈컨퍼런스에서 강윤진 보훈부차관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과 관련된 언급을 하신 게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종득 위원 국정감사 때 사과도 하셨고,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임종득 위원 사과는 하셨지만 보훈부 직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8명 중에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 이런 말을 고위공직자인 차관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는 차관도 사과를 했고 저도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피켓시위 할 때 나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PPT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 봤어요.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당사자들인데 이때 당시에 겪었던 충격과 고통보다 지금 겪고 있는 게 더 심하대요. 지금 강윤진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이걸 지금 자기가 외상후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괴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심사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종득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KFN TV, 구 국방TV입니다. 올해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돌파한 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존에, 좀 오래전부터 100만 돌파라고 알고 있는데……

○임종득 위원 이게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 중에 8년 연속으로 1위를 하는 채널

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정말 저는 여기 구독도 하고 있고 실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보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정부안에 이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렇게 돼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체 제작비가 45.3%, 외주 제작이 35.3% 이렇게 삭감되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확 줄어 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작비가 저렇게 줄어 들면 여러 가지 군에 대한 서비스 질과 콘텐츠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전임 홍보원장이 이 정부와 관련해서 좀 날을 세우면서 문제가 있었고 또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런 해프닝이 있어 가지고 보복성으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물론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TV 인력이 한 54명 정도 되는데 진짜 다른 방송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원이고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관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 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까 국방위 전체회의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합참의 중·대령 진출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령 151명 중에 110명이 진출을 하고 대령 39명 중에 30명이 진출을 합니다. 예년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인원이 좀 늘어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 통상 인사가 있기 전에 미리 경고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고 자기가 갈 보직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게 합참에서 지난주 목·금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 이번 화요일 날 심의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는 겁니다. 중·대령이면 거기 중령·대령 진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무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육군은 중령·대령들은 18개월에서 3년, 다른 군은 약 2년마다 보직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약간 오류 % 상회한 정도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숫자의 증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 오류 %가, 오류 % 증가한 부분이 사전 예고 없이 군생활을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직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충격이고 불만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장관님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참석, 오늘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꺼내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국무조정실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최근에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 오고 있다는 보도 많이 접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 한 달 동안 제주 해안에서만 마약 의심 물체가 10여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도 발견이 됐다 그래요. 현재까지 발견된 양은 총 29kg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97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런 뉴스를 접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님, 이번 달 말에 출범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마약청 구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입니다.

○임미애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달 17일경쯤 출범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합동수사본부 구성할 때 해경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현재 조직표상은 경찰 수사4팀으로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경 인력이 5명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 해양 밀수범죄 수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마약 밀반입 압수량의 80% 이상이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해양 밀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4월 달에 강릉 옥계항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습니다. 무려 코카인이 1.7t, 국민 5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24년 1월 달에는요 부산 신항에 입항한 화물선 바닥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됐고요, 같은 해 2월 달에는 서해섬 지역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마약을 밀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해경이 직접 검거했는데요. 그런데 해경의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고작 26명입니다. 전체 1만 3000명이거든요, 해경 인력이. 그런데 해상 밀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이 인력이 이렇게 적습니다. 반면에 경찰청은 378명이구요. 대검찰청은 297명이 마약 전담 수사 인력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해경은 자체 정보력이 없어서요 국정원에 제보가 접수가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검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해경의 경우는 역할이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인데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서해와 독도 인근에서 주권 침해 행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5일에 한번꼴로 순시선을 투입해서 우리 조사선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계 각국은 해경이 폴리스가 아니라 코스트가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주권 수호뿐만이 아니라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해경은 과연 그 고유 직위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해경은요 내륙의 선거사범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도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정부조직법 제47조 2항에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양경찰청법 제14조에도 없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봐도 제3조에 없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해경이 그 해 공식 해체됩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 7월 26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창설됩니다. 그 후 같은 해 9월 22일 경찰청과 수사권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안에도 해경의 직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쳐 보면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로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륙에서 벌어진 선거사범이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협중앙회장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를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봤더니요 이게 그 전에 같은 사건인데 부산중부경찰서, 소위 육경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향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수협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해경에서 수사를 했고 모두 다 불송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피의자의 직업에 따라서 너는 어민이니까 해경에서 수사하고 너는 농민이니까 육경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수사권이 분할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

원회에다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고로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왜 이게 해경으로 넘어갔는지를 물었더니 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수사권 관할을 바꾼 겁니다. 법률이 정한 수사권 체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수협의 임원진들은, 수협의 조합원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해경이 바다에 나가서 불법조업 단속할 때 수협에서는 조합원들의 명단과 배 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단속 뜬다고 알려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 집단이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겠느냐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해수부와 해경이 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해경이요 선거사범이나 수사하고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으로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 드린 것처럼 마약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인 지금 시점에 11월 한 달 동안에 마약이 발견이 된 게 10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으로 반입되는 마약범죄를 소탕하기에 앞장서야 할 해경이 내륙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업무를 해경으로 넘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새 정부 들어서 이거는 분명하게 업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에 침범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마약 밀수, 불법조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으로, 본래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해수부 그리고 해경과 함께 협의해서 업무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좀 키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한번 쟁겨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조실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농해수위에 있다 보니까 군 급식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군 급식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의 향의가 빗발쳤고요. 정부 당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조달체계에서 장병 중심의 조달체계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민간위탁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군납 납품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농·수·축협을 통한 농수축산물 수의계약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조달청의 MAS를 통한 경쟁 조달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공육이나 가공품을 조달받는 부대별 경쟁입찰 조달 방식인데요.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농축수산물의 수의계약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이 늘면서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2021년도에 가공식품 비율이 18%였던 데 비해서 2024년도에 58%까지 늘어납니다. 학교 급식에는요 학부모 중심의 학교 급식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완제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서 조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믿고 군대에 보냈는데 장병들이 먹는 조리의 재료가 주로 완제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는 이것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24년도에 급식비 단가가 1일 기준 1인당 1만 3000원인데요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가 4834원으로 수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비중을 늘리니까 수의계약 비중이 21년도에는 한 71%였는데 24년도에는 38%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기본급식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의 납품 비중이 올라갔고요. 우리 장병들한테 공급되는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식품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지적드렸던 가공식품에 국내산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경쟁 조달을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된장의 예를 들면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서 군부대에 납품된 종류가 7종인데요, 금액으로 치면 14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두 종류만 국산콩으로 제조된 된장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수입콩으로 제조된 된장이었습니다. 총중량 비율로 따지면 5% 정도만 국산콩이었고 나머지 95%는 수입콩 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급식 조달체계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병들은 수입 음식의, 수입 식재료의 의존 비율이 높아졌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중은 확실하게 떨어진 거지요. 이게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단가 문제로 100%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쌀 재배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콩 재배 면적이 늘었고, 콩 재배 면적이 늘어서 수요가 밀바탕을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군 급식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단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혹은 국산콩을 사용해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체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더라면 농가도 좋고 그리고 장병들에게도 건강한 급식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이 되었을 텐데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

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물량 축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군 급식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보완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난 결과가 군 장병들이 수입 식재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4년이 지난 뒤에 평가가 그러하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그 상황에서 군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병의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품이 아니라 원물로 했을 때는 조리에 관한 문제가 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요. 조리병이 줄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리병들의 업무 경감을 시켜 줄 필요가 있었고 부대별로 맛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물과 가공품이 됐고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수·축협에 있는 많은 농업인들과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안정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요, 잠깐만. 제가 다른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국방부 거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대로……

○임미애 위원 선호도와 관련해서는요 학교 급식을 할 때는 선호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건강식에 방점을 찍습니다. 아이들이 튀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튀긴 재료로 식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것을 줄이고 찌거나 조리는 방식의 조리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군에서도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군대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저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전체 식수 인원의 10% 정도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학교 급식보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점점점 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늘리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학교 급식보다 훨씬 대량 인원에 대해서 삼시세끼를 다 준비해야 되는 업무 부담이 상당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식 급식 지원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조금 원물과 가공품의 적정 비율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5초박에 안 남았는데요.

대구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합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대장동사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계속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장관입니다.

○최형두 위원 이 항소 포기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의 지배, 법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국민이겠고, 당장 예산으로 인한 또는 이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입니다.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산이 아무리 거리를 두고 장관이 아무리 말을 돌려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국제적인 의구심도 자초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경제신문 기자가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기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사와 재판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개발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내부자가 아니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 수사를 지연시켜 온 엄청난 수사 방해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의문의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고 억울한 외침은 대나무를 통해 세상에 전해져서 수사 이전부터 이미 성남시 배경의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대장동 일당이 누리게 될 7800억 원은 정당한 수익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7800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7800억 원은 다 계산의 근거가 있습니다. 검찰이 7800억이라고 책정을 했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1차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최형두 위원 여기는 분양 수익금 또 개발이익이 다 있습니다. 없는 개발이익을 보탠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큰 발명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적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로트를 맞았습니까? 오로지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와 얽힌 인허가 특별 특권이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중용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는 항소 포기를 중용한 바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법무부차관이 그랬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차관도 종용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진상 파악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내부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 검찰청법 위반 아닙니까, 만일 법무부차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런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대행은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검찰총장대행이 한 얘기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대질심문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지금 사의까지 표명한 마당에……

○최형두 위원 공수처장님, 이것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예, 기획조정관이 잠시 대참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다음에 이게 아마 고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과거에는 대통령 부부의 불기소에 침묵하다가 지금은 항명한다고 하는데 그때 잘못했으면 지금도 잘못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관님,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별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개별 검사가 아니고 반윤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까지도 격앙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런 사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의 지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차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조사하고 검찰총장대행과 대질심문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고발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정말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이 문제를…… 이게 이렇게 되어야 법의 지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제 이게 그대로 묻히면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슬라이드 준비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7800억을, 한 8000억 되지요. 2026년 정부예산 사업의 비슷한 액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 이게 9000억 원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1조 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부채 더 안 내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해 예산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 분야 질문 때 이야기했지만 경제는 재정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소련의 경우 요소 투입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계속 경제가 성

장했겠지요. 그런데 경제가 망했습니다. 왜? 공산당 관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거짓 통계 또 공산당 내부의 부패,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 이야기하기를 ‘왜 1980년대, 199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나’. 요소 투입, 자본 투입만으로,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제는 재정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빚만 엄청 늘리고 후대에게 큰 부채를 물려주고 물가와 금리만 상승시켜서 서민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입니다. 우리 인구 1000만, 2000만을 먹여 살릴 천재들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 몰입의 순간을 이어 가서 돌파를 이루어 냈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1000만, 2000만을 먹여 살릴 그런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는 혁신이고 불안한 국제 환경에서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빌미로 파업이 터질지 몰라서, 어디서 밸류 체인이 끊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경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불안 요소를 줄여 주는 것도 혁신이고 그게 규제혁신입니다. 그것만 해 줘도 우리가 100조 추가 부채 안 내더라도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도둑놈, 사기꾼들이 국민 혈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고 빼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에서 부패 수사, 경제범죄 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 OECD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당시에 부패 수사 총역량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도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이게 뭐냐 하면 부패인식 조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부는 대장동 사건도 봐줄 만큼 부패했구나, 권력 있는 놈들이 그런 권력의 고리로 저렇게 엄청난 범죄자들에게 범죄수익을 환수도 안 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대한민국이 부패했구나, 이재명 정부도 부패했구나. 법무부장관은 정의감이 없구나’……

법무부는 영어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정의부입니다. 단순히 소송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이 정의감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렇게 국제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이 나라가 부정부패한 나라구나’.

지금 보십시오. 우리 아시아·태평양에서 몇 등 합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합니다. 실제로 또 검수완박 이후에 부패 수사 총역량이 떨어지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부패지수, 일인당 GDP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부패가 없다. 저런 대장동 사건 같은 게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GDP가 높습니다. 그냥 빚내서 막 재정 투입한다고 GDP 안 높아집니다. 부채비율만 높아집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부패지수가 10점이 증가하면 한국 일인당 GDP 영향을 보십시오. 부패가 개선되면요 국민소득도 올라갑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른 겁니다. 부패 개선이 없으면 아무리 요소 투입을 늘려도 더딥니다. 아무리 기업이 몸부림

쳐도 더됩니다. 왜? 큰 도둑놈들이 돈을 빼먹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리고 법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로 리뷰(Havard business law review)에서 나온 겁니다. 법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고 소득 불평등이 낮은 겁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다 보여진 겁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함으로써, 8000억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한 해의 엄청난 예산 재원을 도둑놈들한테 몰아주었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정의감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라는 연계 인식을 더 강화시켰고, 왜 이렇게 손해 볼 짓을 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국가청렴도, 반부패행정시스템, 이런 지표가 많습니다.

정의부장관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빚내 가지고 막 부채 내서 쿠폰 뿌리고 이런다고, 잠깐 언 발에 오줌 누기는 되겠습니까만 나라 경제를 더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라는 곳은 부패를 척결하고, 그래서 반부패수사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이 정의를 회복하고 ‘정의의 수호신이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아니 검찰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애매한 말쑤으로 입장을 흐리시니 그렇다면 차관하고 검찰총장대행하고 대질심문을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내라니까 그것도 애매하게 그러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본시장법 보십시오. 자본시장법 이거 검찰이 직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시장의 큰 범죄를 적발해서 기소하라고 검찰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까.

다음 보십시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 뭐니까? 큰 도둑놈들이 국고를 가로채고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린 대가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간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검찰은요 장발장 시대에는 인권의 보루로 만들어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발장이 억울하게 쫓겼을 때 만일 그 당시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장발장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인권의 보루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범죄, 지능범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지금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경찰은, 경찰도 우수합니다. 경찰도 우수합니다만 경찰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전까지는…… 지금 특정법 배임, 경찰 무혐의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더 심각한 불신하게 생겼고 당장 그 엄청난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감으로써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축소시켰고 더 크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국

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나라는 저런 일도 벌어지는 나라구나,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관여됐다고 해서 항소도 포기하는 나라구나, 8000억 원이나 되는 분명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범죄성도 더 이상 따지지 않는구나’.

부채를 늘리고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10조 원 적자국채, 나라 빚 1415조 원, 매년 이자만 36조 원이 붙어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 한 해에 내는 이자만 36조 원인데 내년도의 예산 항목 중에서 비슷한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국방예산이 60조인데 이 절반을 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자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최형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GDP 대비 이자 지출 비율은 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것도 따져 봐야 될 문제고요. 있을 때 잘해야지요, 지금.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재부에 부담 주지 말고 투명한 경제하고 법치 세워도, 규제 혁신만 해도 경제 성장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답변을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곰곰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함께 법의 원칙을 되찾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지금 교육재정 지출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일입니다만 올해가 아마 근래에 가장 많은 수능 인구가 있다고 그러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수능시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학령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의 10%가 교육재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OECD 국가에 대비해서 학습 역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돈만 넣는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다음 보십시오.

응용력 국가 순위에서도 떨어집니다. 이게 교육 혁신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교육 혁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돈만 넣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책임지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은 AI 시대,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고 더구나 초중고는 학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딱 칸막이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나면 그 돈을 대학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칸막

이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교부금이 칸막이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고 그것이 혹시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최형두 위원**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장관 최고진**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 교육이나 유아교육 쪽에 쓰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는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런 말이 굴뚝같을 텐데 못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재정은 저렇게 늘어나는데 학습 역량은 떨어지고 그리고 칸막이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에 쓰거나 고등교육에 써야 될 돈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안 오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차관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ODA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제가 KAIST, 지금 아세안의 우수한 공학 인재를 국내에 초청해서 유학교육을 시키는, 과거 1950년대에 미네소타대학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던 방식으로 이제 ODA를 외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지 말고 ODA 재원으로 그 인재를 국내로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우리나라의 R&D 인재로 쓰자라는 제안을 제가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한-아세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 해 보자는 연구용역비를 이번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

외교부차관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인 출신의 문체부장관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한테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10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GPU를 샀습니다. 그런데 GPU는 수요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클라우드.

지금 뉴욕타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OpenAI와의 저작권 소송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 크려면, AI 시대의 콘텐츠를 이제 개별 서버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GPU 수요, NPU 수요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을 위한 클라우드를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언론도 AI 시대에 대비하게 하고 우리나라 GPU·NPU 수요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반쪽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직업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에서 그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감후보들에 대해서 공약 평가를 했다는 이유 등등등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직업을 이유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만……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또 답변해 주시고요.

OECD 국가들 중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전종덕 위원 독일·프랑스·영국 모두 정당 가입과 개인적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정치적 중립’ 이렇게 명확한 원칙만 있습니다. ILO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제한이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신 때 만들어 놓은 조항 하나 때문에 50년째 그대로입니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국감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 다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퇴근 후에 근무지 밖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해도, 이런 것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행법은……

○전종덕 위원 주무장관이시니까 당연히 밝히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행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적 소신이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65조 개정이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 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중립 의무를……

○전종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근무 중에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근무 외에 퇴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근무 외라도 직무와 관련한 것에 한해서만……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퇴근 시간 이후에 이런 정치적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은 입법사항이기도 해서요.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을 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셔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전종덕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난 1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전종덕 위원 또한 우리 장관님께서도 지난 국감에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고 우리나라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차원의 법 개정이나 제가 아까 행안부장관님께 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준비도 하고 있거니와 아까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국민적 합의를 고려한 입법사항이어서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교육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국회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함께 교원과 공무원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국회 앞에 반쯤 지워진 국민 말고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우리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공무원도 시민이고 기본권 보장하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우리 국민주권정부

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행안부장관님은 답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전종덕 위원** 광주 군공항은 도심에서 가장 인접한 군비행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또 주민들은 전화 통화도 어렵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째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감내하고 있지만 국가의 보상체계가 주민들의 고통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주민들의 목소리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보상기준이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은, 소음등고선입니다. 80웨클이면 보상, 79웨클이면 제외 이런 방식입니다. 같은 마을에 같은 단지에 벽 하나를 두고 한쪽은 보상이 되고 한쪽은 보상이 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만 커지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공항인데 광주·대구·수원은 85웨클 이상부터 보상이 되고 평택·서산·군산은 80웨클부터 보상이 됩니다. 같은 기종의 전투기, 같은 강도의 소음인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게다가 민항기의 소음 피해는 75웨클부터 보상하거든요. 그런데 군용비행장은 80~85웨클부터 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비행이 강도도 높고 주파수도 불규칙해서 우리 주민들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큰데 보상기준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종에 따라서 3~5만 원까지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년째 동결 상태예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생활비 변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주민들께서는 등고선이 아니라 마을 단위나 단지 단위 아니면 도로나 하천 단위로 이렇게 명확한 지형을 단위로 해서 보상구역을 정하고 도심지역도 80웨클 이상으로 보상 기준을 바꾸는, 이렇게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라고 요구하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님, 이것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대도시와 또 기타 도시 구분을 해 가지고 배경 소음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체계가 지금……

○**전종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저도 광주공항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다른 어떤 변화 요소까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현실에 맞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보상비는……

○전종덕 위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현실화하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또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공항은 민간 비행회사에서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소음방지책을 마련해 준 것이고 군공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문제 역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는 현실에 맞게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수년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해 주시고 보상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대통령실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지금 10년째 미해결된 광주시의 현안입니다. 대통령께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께 약속하신 이후에 대통령실에 직속 TF가 구성이 됐고 국방부를 포함해서 6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TF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역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이전 대상 지역의 지원 방안 문제라든지 재정 분담 문제라든지 단계별 추진 일정들을 포함해서 실질적 이행을 담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워킹그룹이라 해 가지고 부지자재장들을 포함해서 국방부하고 국토부 또 대통령실과 함께 실무회담을 두 번 했고요. 다음 달 초에 6자 회담, 소위 말하는 국토부·국방부·광주시 또 무안시 장들이 회담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에 회의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두 번의 회의를 이미 했고 또 6자 회담은 다음 달 초에 한다……

○전종덕 위원 그건 실무회의 하신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궈져야 그다음에 6자 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이 이미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확정된 거잖아요, 국가정책으로.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군공항 부지에 169억의 군 시설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이전이 곧 될 건데 새로운 시설물이 지어지는 것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이것 세금 낭비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전사업과 좀 부합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공항 시설에 대한 보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규시설은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신규시설이 있습니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좀 부적절한, 26년에 완공하는 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것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탄약고 이전을 말씀하시는가요?

○전종덕 위원 아니요, 새로운 시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준공하는 169억 예산이고 제가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은……

○전종덕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르게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답변……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전종덕 위원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기재부차관님, 광주지역 현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 건립 중인 AI 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센터 조감도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AI와 헬스케어 융복합 시설로 기업 지원 인프라, 실증 플랫폼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별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지원,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광주가 헬스케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꼭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NDMS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26년 운영 보장 사업으로 125억이 편성됐습니다.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북 산불 재난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하나같이 NDMS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산불의 경우 주민들은 산불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점, 재난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피해 접수나 피해 항목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원금 명목이 들어왔는데 무슨 명목인지를 몰라서 모든 절차와 과정이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또한 표준 항목이 없어서 직접 피해에 대한 입력이 불가능하고 2차 피해, 창고 속에 있는 농산물이나 소형 농기계 이런 것들은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인데 접수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DMS 표준 항목과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피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접수에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그 순간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NDMS 항목에 대한 그동안 피해자들의, 피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미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법령을 개정해서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또 질의가 있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가 아까 그거였고요.

두 번째, 재난 현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복구하랴, 피해 접수하랴, 입력하랴 이 모든 것을 10일 안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누락되면 다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이 담당자들은 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 과중에 또 잦은 인사이동에 비전문성 때문에 상시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도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피해 조사도 하고 직접 입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현장에서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또 주민과 공무원들의 주요 갈등 원인이 뭐냐면 바로 300 지수입니다. 아실 겁니다. 300 지수가 안 되면 접수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100%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걸 회피하고 있는 거지요. 정작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디다 호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개선 과정에서, 재난은 국가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비 부담도 덜어 줘야 되니까 지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전체적으로 NDMS 검토해 주시고 재난 피해를 당한 주민이 두 번, 세 번 절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꼭 책임 있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전종덕 위원** 또 행안부장관님 질문이네요.

소방관 마음건강 사업인데요.

기재부차관님도 들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전종덕 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PTSD나 우울증 이런 것들의 정신건강 위험 실태를 지적하고 업무상 재해심사 관련 제도개선, 마음건강 사업 지원 확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의 상담 결과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70명 그다음에 관리까지 합치면 전체 출동자의 13%에 해당했습니다. 마음건강 사업의 상담사 증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사업에 전국 출동하는 인원을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병원비 지원이 동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책임 아니겠습니까? 또 소방관들의 안전이 바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기재부차관님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방관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3차 질의가 없어서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이북5도위원회 26년 예산이 108억, 이 중에 사업비가 19%, 인건비·운영비가 81%입니다. 연봉 1억 5000 차관급 도지사가 5명에 명예시장, 군수, 읍면동장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 써 가며 해외출장도 가고 있지요. 대부분 통일부 사업하고 중복되고 행사 위주 사업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부합한 조직인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북5도지사의 도지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는 이북5도지사 도지사들의 명예직 전환과 이것을 폐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이북5도민 사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기획재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장관님,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 근무자들이 방학 중 임금이 끊기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서 여름이나 겨울마다 생계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장이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상시 급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방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 증액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 증액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현재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었고요. 같이 연구하고 같이해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빠르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전종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국방부장관님, 꼭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율의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율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소위 친윤 검사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수사를 벌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에 대해서는 검찰의 1심 구형보다 낮게 법원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석방을 해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동규와 거래하며 사건을 조작했던 검찰이, 유동규의 입마저 열릴까 봐 항소를 주저했던 검찰이 마치 윗선의 압력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집단 항명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한줌 정치검찰이 벌이는 검찰 쿠데타로 규정합니다.

이미 드러난 검찰 쿠데타 세력들은 박재익, 김창진, 박현철 검사 등 30여 명에 달합니다. 이른바 검찰 쿠데타 세력의 준동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대장동 원가 계산식을 조작했으며 유동규와 거래하며 거짓 진술에 의존한 조작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항소 파동은 대장동 수사 검사들의 조작수사 범죄를 감추기 위한 친윤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제2차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영학 씨 녹취록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을 왜곡하고 편집하며 심지어 발언자를 바꾸는 등의 조작을 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조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3월 5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원본에는 없는 ‘용이하고’라는 표현이 검찰 버전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마치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것처럼 해석하게 만든 조작입니다.

둘째, 정영학 회계사의 원본 녹취에서 ‘재창이형’이라고 말한 부분이 검찰 버전에서는 ‘실장님’으로 바뀌어 정진상 전 실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본에 존재하지 않던 ‘윗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이재명 대표 등을 범죄와 연관시키는 데 악용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팀에게 묻습니다. 왜 원본 녹취록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검찰 버전을

사용하였습니까? 원본과 달리 바뀐 표현이 공소장과 수사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그리고 수사팀 내부에서 누가 이 조작을 승인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검찰의 단순한 실수나 실무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을 잡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의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요구합니다. 당장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원본 녹취록과 검찰 버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한 범인을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 권력,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선택적 정의를 남용하는 검찰 권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묻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에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했던 7400억 국고 환수 포기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탄핵을 운운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선 불복을 시도하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어선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남용을 밥 먹듯이 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불법 수사의 원천지인 대장동 2기 수사팀, 쿠광 사태 및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으로 유명한 엄희준이 있었고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홍상철 검사가 있던 곳이지요?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검찰들의 위해성 발언과 증거 조작, 불법 면담 등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이 정영학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수사에 활용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님께 그리고 유재성 경찰청 차장님도 특별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전남 순천에는 현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당초 젊은 층 일자리 창출, 원도심 부흥, 원도심 대학로 조성의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노관규 시장이 당초 원도심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 부지를 전혀 관계가 없는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 주시지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막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를 꼬셔야지.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브리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300억짜리가 2000억 짜리가 됐어요, 2000억' 이렇게 김건희 예산 2000억을 확보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노관규 시장은 스스로가 '순천만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확인했던 2000억의 예산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되어 문체부장관이던 박보균에게 김건희가 전화를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직전에 전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녀자가, 영부인이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이 순천시에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면 2025년과 2026년, 2027년까지 예타를 면하기 위해서 500억 이내로 잡아 가지고 2000억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 예산을, 2023년 5월 말에 확정해서 부처안으로 기재부에 보낸 예산안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부탁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30%—정확히는 28.7%—43억 가까이 늘려 달라고 기재부에 수정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는 사례는 거의 100%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화면요.

그러면 김건희가 이렇게 예산을 그냥 공짜로 해 줬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와 연결된 특혜의 검은 고리의 악취가 폴폴 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정점래는 양평고속도로 우회 노선을 설계한 동해종합기술의 대표고 나중에 337억에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주한 한중산업개발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경아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총감독을 맡았는데 한경아는 2022년 9월에 임용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면서 1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아 감독의 지휘 아래서 92억 원에 낙찰됐던 순천만 정원박람회 문화행사가 25억 원이 증액됩니다. 보통의 문화행사의 경우 실비가 늘어나도 일이천만 원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무려 2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순천시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경아는 그 문화행사 과정에서 김범수 같은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도 동원을 하지요.

다음, 동해종합기술공사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폭 매출이,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리고 정점래가 똑같이 대주주인 한중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순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337억짜리 위탁운영 사업을 낙찰받습니다. 이 337억짜리 사업을 낙찰받는 데 노관규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 당장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성 경찰청장대행님, 인지수사 가능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 부분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검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미 특검의 고발 조치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이 부분 인지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낙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한 번 더 순천에 내려왔습니다. 11월 7일에 내려왔고 순천 아랫장에서 노관규와 반갑게 만나지요. 그런데 11월 17일 날 입찰 공고가 났고요 12월 10일경에 수주가 이루어졌고 최종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경아 총감독의 정제입니다. 다름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던 신용한에게 김건희의 최측근 지인이라는 소개를 받고 한경아가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공약 수정에 개입하고 캠프 인사에 개입합니다. 이게 지난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노관규와 김건희 사이에 한경아 감독,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총감독을 맡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행사에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불가능한 92억의 예산이 117억으로 25억 원의 돈이 증액이 됩니다. 이 25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호주머니로 사라졌을까요? 이것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확장 사업, 노관규의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아까 말했지요. 순천만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6개월 뒤에 현실이 됩니다. 6개월 뒤인 2023년 3월 13일 날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변경안을 넣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순천만 정원까지 연결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확장 사업 변경을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문체부에서 이것을 승인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때 순천시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콘텐츠진흥원 팀장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 애니메이션 사업의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을 했던 당사자가 우리에게 제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순천만 정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라고 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가 사업의 최적지로 둔갑을 해서 허위보고가 된 겁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렇게 보고했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문체부에서는 왜 이것을 승인해 줬나 했더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판단하여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고 그룹니다.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업들은 이따 나오겠지만 로커스라는 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는 하지도 않았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업 변경 승인 요청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원래는 원도심의 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기업들이나 청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을 리모델링

비로 변경을 하고 원도심과 국가정원에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정원의 습지센터에 218억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원도심에 사용되는데 이따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때 출장보고서, 문체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출장보고서인데 3월 13일 날 사업 신청을 했는데 2월 22일 날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요. 이렇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문체부장관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허위 보고를 해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노관규와 김건희, 그리고 이 로커스라는 회사가 아까 셀프 추천이 된 겁니다. 순천만 정원 습지센터에 이 로커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업무협약을 맺고 들어오게 되는데 노관규 시장은 이 로커스라는 회사가 1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뺏튀기를 하는데 실제 투자 규모는 나중에 저희가 문제를 삼으니까 200억으로 수정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로커스라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1670만 원인 회사입니다. 순자본 규모가 62억짜리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1600억 원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로커스를 따져 보니까 김건희에게 2억 2000만 원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을 했던 컴투스가 관련돼 있어요. 이 부분도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던 기업, 로커스 혼자 순천만의 습지센터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케나즈와 그다음 회사는 원도심에 본사 이전을 했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냐? 늘린 예산은 어떻게 쓰였냐?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문터광장을 조성했는데 당시 국비 38억 원을 포함해서 349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문터광장은 어떤 곳이나 하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던 곳이고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3·1운동의 성지고. 순천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여기를 허물고 다시 110억 원을 들여서,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비 예산 110억 원을 들여서 거기를 철거하고 이것을 짓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 과정이 정당한 절차와 그걸 밟았느냐?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의회도 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순천시의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왼쪽이 남문터광장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헐려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국가 예산을 이렇게 깨부숴 버리고 다시 110억 원을 또 들여서 애니메이션 기업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순천시민 좋으라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불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 이거 바로 당장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여수MBC가 들어갑니다. 이웃 동네에 있는 여수MBC가 들어가는데, 순천만 정원이 문화콘텐츠개발특구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 이 개발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 도시로 이전시켜서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특구를 이웃 도시에 있는 기업을 빼 가는 데 쓰고요 그것도 순천만습지센터의 앵커 기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노관규 시장이.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의 앵커 기업으로 여수MBC, 공영방송이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 MBC, 공영방송이지 애니메이션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로커스기업인데 로커스기업이 올해 4월 달에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습지센터는 지금도 리모델링 중인데 이미 4월 달에 본사 이전을,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년에 감면받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본점 이전을 해 버렸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인데 본점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순천MBC와 여수MBC 간 투자협약서입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순천시는 여수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입주,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앵커 기업이 아닌 거예요.

앵커 기업은 후발 기업들을 이끌어서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견인하는 기업을 앵커 기업이라고 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수MBC를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서 기회발전특구에…… 특구는 여러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1500평이 넘는 최신 리모델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지방 정부의 특혜의 그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문체부장관님, 이것 제대로 된 겁니까? 지난번에 조사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대리 박형수 조계원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특별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감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엄정하게 조사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의 불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노관규 시장에 대한 허위 증언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건데요.

감사원장대행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잘 검토를 해서 감사 필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계원 위원** 문체위에서도 의결을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희** 예,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반드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끝난 후 발언하시면 국민들께서 듣지를 못하십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율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율 송기현 위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라 한 것이 사실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한테 여쭙보기보다, 법원행정처에서 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기현 위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하는 게 원칙적인 건가요? 맞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항소를 하든지 혹은 항소를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1심에서 지금 여태까지…… 노무현 정부 이후로 사법개혁을 하면서 법원 개혁의 가장 큰 흐름은 1심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운영하자는 것이 가장 큰 흐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흐름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사실심을 중시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는 가장 첩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1심에서 판단을 한 것을 2심에서 다시 할 때 증거를 다시 동일한 증거를 반복해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1심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큰 흐름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1심까지 하는 동안에는 검사가 정말 압도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난 다음에 공판 과정까지 하고 나서 재판을 하고서 결론을 받은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1심에서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기를 판사들은 바라고 있고 또 그걸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게 맞고 여러 나라가 그런 식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만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무조건 항소해서 끝까지 다투어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초임검사 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기소했는데 1심 무죄 받은 것을 끝까지 우겨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된 사건을 지금도 굉장히 후회합니다. 당사자가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정말 망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엄청 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1심까지 받아 가지고 봤을 때 판결에서 하는 것이 1심 판사가 어느 정도, 그냥 대충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 무죄를 했으면 그때는 검사들이 그 무죄 받은 것이 합당하냐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유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인 원칙은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어야지만 유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민사와 달리 높은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려면.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기현 위원** 1심 판사까지 해서 이게 무죄겠다 생각하는 정도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에는 검사는 항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보다 사법접근권, 접근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심, 그중에서도 1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검사가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제기 여부 또 항소제기 여부는 검찰의 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현재는 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맡겨져 있지만 1심까지 해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 검사로서는 항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의 과오라든지 잘못 수사한 것을 덮기 위해서 끝까지 가 보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 가장 우려되는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광주에서 농약 독살 사건의 경우에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또 그게 유죄가 났잖아요. 결국 그때 유죄가 확정되는 바람에 수감돼서 수용생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심 무죄에 대해서 그 경우에 검사가 항소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 고생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이 사건 판결문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송기현 위원** 중요한 부분, 무죄 난 부분 읽어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기현 위원** 특경법상의 무죄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읽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시는 바와 같이 특경 부분이 특히 좀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법리를 검사가 기소해 가지고 무죄가 난 겁니다. 이 판결문에서 예를 들었는데 특정법상 50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 행위가 종결된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임행위 시점에서.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는……

○**송기현 위원** 배임행위가 완결된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계약이 배임이 됐을 때는 계약 시점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법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할 수 있어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니까.

이 판결에서 예를 든 것을 보면 군용유 납품계약을 했을 때 그것이 일정 금액으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에서는. 그런데 군용유라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 일정한 가격이 아니라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낮을 때를 대비해서 특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유가가 낮았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그 사건의 경우에 계약 시점에서 기름값이 낮은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특정법상 가격을 환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배임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판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 계약이 딱 됐을 때 그 시점으로 봐서 배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는 것은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 건축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또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서 이것이 특정법상 몇천억 이익이 됐다 그래 가지고 기소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검사가 과잉해서 기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런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경제범죄에 있어서 손해액 인정은 많은 경우에 사실인정 문제이긴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고도의 법률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 사건은 법률적인 내용을 쉬운 얘기로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당연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행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잘 분양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임 법리하고 안 맞잖아요.

어쨌든 그것 떠나서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무조건 항소하는 그 자체는 좋은 관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 또 항소제기 여부도 사안에 맞게, 실질에 맞게 신중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볼 때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그때 검사가 또 항소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 쪽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법개혁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일반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 1심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항소, 상고의 판단을 받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어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수사 검사가 과잉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경제성장수석하고 경호처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오셨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나왔습니다.

○**송기현 위원** 2022년 6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민 4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대통령실 이전 기념 국민 초대 행사로 대통령실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로 위장을 하고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대행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부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글썄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송기현 위원** 보도된 것 잘 모르시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송기현 위원** 이게 용산공원 관련된 행사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용산공원하고 대통령실하고 거리가 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좀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용산공원 개방 행사는 아니잖아요.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 대통령실 예산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예.

○**송기현 위원** 그리고 또 경호처에서는 정년이 넘어 가지고 경호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경호처장이 자기 육사 동기다 보니까 이 경호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용역 자체를 주관하게 합니다. 법률의 규정 없이 임의로 경호처에서 조직을 따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정부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는, 이것은 정부조직법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나와 있지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본관, 부속건물 등등 해 가지고 공사를 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5층 집무실 내부에다가 사우나시설 신축하고 관저 옆 63.4㎡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다가 스크린골프장을 아마 설치했는가 봐요. 경호처가 예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 경호처 예산으로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안 되지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송기현 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법정문화도시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2019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24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연평균 18억가량의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집행하고 난 다음에, 5년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간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사후관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24개 도시에 연평균 18억씩 지급을 하면 꽤 많은 국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지원되고 난 다음에 도시별로 보니까 어떤 도시는 집행률이 높고 어떤 도시는 낮고, 이 집행에 대한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한 데는 집행률이 낮고 또 조례 같은 걸 제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한 데는 아주 집행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문체부가 평가하는 지침을 정해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데를 정해서 지속하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게 안 된 데는 안 된 데에다 좀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지원 후에 자생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나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미진한 데는 따로 별도 관리해서 지원된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해당된 조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해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활용이 잘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원주 지역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평균 집행률이 90% 이상 잘됐어요. 이때는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이 지원센터를 해체하고 이것을 원주문화재단에 편입시키면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니까 집행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보면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원주시에서는 올해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지 말고 문체부 차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안부장관입니다.

○송기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강릉에서 가뭄 때문에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56mm였는데 최근 10년간,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을 해 보니까 1298mm가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라고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균 강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영동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0mm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한 25% 정도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960mm인데 영동 지역은 49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강릉 지역이 한 414 정도 되고.

이것 보면 이게 단발적으로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강우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강우 패턴 때문에 영동 지역 가뭄이 지속적으로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같은 영동 지역도 속초나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뭄을 겪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강릉은 그 투자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가뭄 대책시설들을 갖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기현 위원 저희도 올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따져 보니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 대규모 관정을 연결하는 거라든지 또 다른 상하수도 보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이게 포괄 이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될 수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릉 지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송기현 위원** 이게 수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해 가지고 물이 오래 쌓일 수 없는 그런 구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으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송기현 위원** 첫째는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속초 지역은 괜찮았는데 강릉 지역은 어렵고 이런 사정이 생겼고요. 어느 때 보면 또 이런 쪽은 괜찮았는데 밑에 삼척 이쪽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동권 전체로 해서 광역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행안부 관할 사건은 아니지만 도암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국무조정실도 나오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송기현 위원** 국무조정실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바람에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안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조정실에서도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저께 법사위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계속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워낙 중요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꾸 ‘조작, 조작’ 하지만…… 수사검사나 공판검사 수십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셨고 그리고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건 아무런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때 그때도 국회의원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부장관의 공식적 지시가 아닌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냐 하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장관이었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외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서로 공방이 있었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과거의 자기 발언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왜 다른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사 과정에 있는 수사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1심 판결 무죄 난 것 관련해 가지고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수사 진행과 항소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게 수사가 다르고 재판이 다르고, 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800억 추정과 관련해서,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1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법의 27조 6항에 보면 이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항소심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PT 좀 띄워 줘 보세요, 판결문.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 제기한 것 맞다. 그런데 지금 이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았고 형사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피해를 민사 절차로 회복하기는 심히 곤란하다. 그래서 국가가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추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항소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것은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조배숙 위원 왜 해석이 다른니까? 지금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패재산몰수법의 단서규정에……

○조배숙 위원 지금 제가 저기에다가 띄웠는데요.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칙적으로는 추정이 안 되는데 단서규정에 의한 추정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 그에 따라 추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추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조배숙 위원 지금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 환수는 별개의 절차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두 조항 다 피해자에게 몰수……

○**조배숙 위원** 별개의 절차인데 부패 이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해서 이것을 피해자한테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단서조항들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추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설명해 준 겁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을 했고 78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같이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차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7800억 원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저는 1심 판결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검찰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입증하겠다고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4년 동안 입증했는데 배임액을 입증 못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검사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가 외압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사퇴했고 노만석 직무대행 역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당 검사들을 실명 공개하면서 PT로 띄워 가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급기야 검사는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특권을 누린다면서 검사징계법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검찰의 반란을 분쇄하겠다 이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그리고 또 항명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치적 협박입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사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는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에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TF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총리실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총리실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여기 총리실에서 나와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무조정실 나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국무조정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여기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비상계엄에 참여한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 TF 아닙니까?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겨우 6시간 만에 해제됐어요. 그나마 대부분 공무원은 일반 국민하고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몰랐던 계엄을 일개 사무관, 과장이 어떻게 모의하고 협조했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 6시간을 이유로 계엄 전후 10개월을 통째로 뒤지겠다고 합니다. 전 행정기관 49개 부처를 상대로 공직자 117만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용 PC, 서류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 제출이라는 이름에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란 수사가 아닙니다. 전 정부 인사를 걸러 내기 위한 숙청 프로그램, 정치적 충성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대전화 자발 제출을 유도하고 거부하면 대기발령,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데요. 영장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장 없이 해도 돼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아닙니다. 휴대전화 건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무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어떤 말씀이나 하면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혐의가 있고 그런 상황……

○조배숙 위원 잠깐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혐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조배숙 위원 수사기관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아닙니다. 혐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조배숙 위원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헌법 12조, 16조 보면 영장주의입니다. 그리고 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헌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2항에 보세요. 법률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내란행위 제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보받겠다고 했는데 이것 보면 이 제보센터가 까딱 잘못하면 무고 그리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음해성 제보, 경쟁자를 견제하고 또 정권을 비판하는 공무원을 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TF하고 비교해도 범위는 더 넓고 조사의 성격이 더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해요. 이것은 적폐청산 시즌 2가 아니라 내란청산 시즌 1 그리고 완장 체제입니다. 이 제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사실상 상호 감시·고발 체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공직사회의 불신과 분열,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국가역량 파괴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며칠간 공직사회가 온통 이 TF로 술렁대는 것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잘못 움직였다가 내란 협조자로 찍힐 수 있

다' '휴대폰 제출 요구받느니 차라리 직위해제당하는 게 낫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모습입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저는 빅브라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국민이 감시받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사회입니까? 이런 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위원님, 헌법준중TF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조배숙 위원 짧은 시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요. 이게 뭐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법에 근거하고 국민의 제한권은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전부 다 맞고요. 정부도 그런 토대 위에서 이 TF를 운영하는 거고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발상 자체를 보세요. 내란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그 기준도 모호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그래서 그것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행위를 선정하고……

○조배숙 위원 그리고 보세요. 12개 부처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공관장은 한국에서 수억만 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내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국민으로부터 역풍이 불니다. 공무원 사회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에 명확한 대상을 관계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우려하는 일이 없……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말은 안 해도. 왜냐하면 불이익 받을까 봐 말은 잘 안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관련된 예산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조건이 붙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특수활동비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는 데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민생에 대한 범죄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계셨지만 단서조항에 일반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특별활비를 써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법무부장관이 이걸 자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기준하에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말 공정하게 일선 부서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이거 완전히 정치 보복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그게 단서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필요한 부서에 서’……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하도 저희들이…… 그러나 이것에 단서조항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대조건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큼니다. 안 그렇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절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게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저는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면서 정치 보복적인 언사를 넣어서 이걸 부대조건으로 넣습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완전히 중립적으로 또 일선 수사기관의 요청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다시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작년 예산 때 저희들 예산 삭감했습니다.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했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다.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산을 동일한 액수 수준으로 되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후 25년 추경을 통해서도 특활비를 41억 원 편성했고 내년도는 아예 전체를 다 복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입장을 번복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있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검찰은 거의 20억 원대로 삭감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만 작년에는 다 깎았잖아요. 0원이었잖아요. 결국은 작년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에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이렇게 과거에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자르고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살리고 그러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고, 저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뻔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잠깐…… 요새 자꾸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PT 띄워 줘 보세요.

지금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극우는 대림동에서 나가라’ 이렇게 문구가 적힌 한 국어, 중국어 피켓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여기 ‘나가라’ 구호 외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 누구든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표현의 자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을 보면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지금 위원님,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에요.

○조배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김용수 2차장님, 오늘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수 2차장님, 12·3 내란 때 국무조정실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이었습니다.

○박민규 위원 공무원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박민규 위원 지금 국무조정실…… 아까 질의했던 헌법TF,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처럼 핸드폰 같은 거, 사생활 침해 안 하기 위해서 혐의가 짙은 일부 소수의 업무한 사람들에게만 동의를 거쳐서 받아서 조사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 누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일반이적죄까지 의혹이 나오면서, 북한에 무인기까지 보내 가면서 내란은 물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공무원들을 분노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견을 물어도 답을 못하시겠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님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 실장이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경제실장이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때 경제 좋았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위원 나랏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그 대통령이 바로 공무원을 분노케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조배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길지 않게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물론입니다.

○박민규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박민규 위원 저는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인사혁신처장님 또 시간이 되면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통령선거까지 3년 임기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에 대해 통계조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는 명백한 정치보복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은 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인 23년 9월에 국가통계의 조작이라는 중간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외의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검찰은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22대 총선 직전인 24년 3월 관련자 기소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 직전인 25년 4월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와 거의 똑같은 최종 감사결과를 재탕으로 발표하는 등 주요 선거 직전 때마다 감사원과 검찰은 여론을 선동해 왔습니다. 통상 감사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데 감사원은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는 디지털포렌식까지 동원하며 표적감사·강압감사·조작감사를 진행했고, 직무상 책임을 다했던 우리 공직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검찰 또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최근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은 당초 대통령실·국토부·통계청 관계자 11명의 공직자들을 조직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며 기소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판 도중에 검찰 스스로 공소사실을 조작이 아닌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의해서 통계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검찰은 관련 문서를 삭제하겠다고 하며 검찰이 재판 중에 또다시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보정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사 결론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정치검찰의 명백한 조작기소, 공소권 남용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는 이런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검찰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체적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꼭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쇄신하고자 운영쇄신TF가 운영되고 있고 이 건 진상조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진상TF는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진상을 규명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엄밀히 조사하셔서 발표하시고 과정 또 결과는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조직개편 예정인 검찰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은 이제 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통계조작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

니다. 또한 최근 몇몇 검사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미제기에 항명하겠다고 여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 줬을 때 이렇게 항명이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헌법기관도 아니고 그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법령을 위반해 제멋대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당하는 일이 없는 우리 검찰 공무원은 퇴직으로 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직 진행 중인데 국가 법체계를 흔드는 이런 행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성호 장관님께서서는 제대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국민주권정부의 검찰은 그 이전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민규 위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채용·승진·윤리·연금, 공무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인사 제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처장님?

요즘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급여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무작정 임금을 올려 줄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 임금 수준이 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매년 정부는 공무원 평균 임금을 발표합니다. 올해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71만 원입니다.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한 25년 8월 민간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2만 원,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389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공무원 급여가 해당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감안해 보면 한국 공무원의 급여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특히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이면 직장을 떠납니다. 정년 보장된 국민은 매우 일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저임금 일자리 또는 실업 상태로 지내는 50대에 공무원은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25년도 일반직공무원 호봉표입니다. 실제 급여는 공무원 같은 경우 수당들이 추가돼서 호봉표의 1.5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급여가 낮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 체계는 철저한 연공급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잘해도, 못해도 자리만 지키면 월급은 오르고 평생 고용도 보장됩니다.

실무 현장에서 업무에 시달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일은 많은데 근속연수가 짧으니까 급여는 적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하면 업무를 더 맡기고 일을 못해도 잘릴 걱정이 없으니 월급은 자동으로 오르고 의욕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보니까 처장님 인사말씀에 직무와 역량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직무의 내용과 업무의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로만 급여가 오르는 현행 공무원 호봉 체제,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 있으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러니까 직무와 성과 중심의 요소가 급여 체계에 점차적으로, 확 바꿀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바꿔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단기적이라는 거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단계적으로.

○박민규 위원 단계적으로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박민규 위원 저는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공직자들의 유인 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빠른 검토와 발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박민규 위원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호봉표입니다. 이거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같은 초등학교의 2학년 1반과 2반 담임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두 선생님은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 2반 교사는 1반 교사보다 월급을 거의 세 배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1반 선생님은 스물다섯 살, 2반 선생님은 예순 살이시고 근속기간이 길어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 공무원 임금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극단적인 연공급입니다. 40호봉의 근속가산호봉까지 합치면 호봉만 50단계, 여기에 원로교사수당까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선진국으로 거론하고 있는 핀란드를 보니까 초임 교사와 최고령직 교사의 급여 차이가 27%뿐입니다. 즉 초임 교사 월급이 100만 원이면 40년 경력 60대 교사가 127만 원이고 참고로 그 차이는 독일 같은 경우는 33%, 100만 원이면 133만 원, 미국의 경우 56%, 100만 원이면 1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력 호봉 산정도 매우 폐쇄적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과 활력을 위해서는 개방적 인사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목적으로 민간경력 채용이나 다양한 임기제공무원 등을 운영 중인데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공채의 경우 민간에서 쌓은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허점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사회생활 하다가 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흥미를 느껴서 다시 서울시 행정직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가상의 두 분이 계십니다. A씨는 대기업 마케팅 및 기획 부서에서 15년 근무한 분이고 B씨는 사범대를 졸업해서 중학교 도덕 교사로 15년 근무한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분이 서울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급수의 7급 첫 월급을 받았는데 차이가 200만 원이나 납니다. 왜냐하면 A씨는, 즉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A씨는 7급 1호봉, 중학교 도덕 교사였던 B씨는 7급 16호봉이기 때문입니다.

처장님, 이렇게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행정직의 경력이 대기업 경력과 중학교 도덕 교사 경력 중에서 무엇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직무 연관성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마케팅 하신 분이 더 맞겠지요.

○**박민규 위원** 이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현재 공공부문 경력이면 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100% 호봉을 반영하고 도리어 전문성이 연결된다고 보이는 민간 경력은 직무 연관성이 높아도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채용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채용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냥 일반공개채용을 하면 공무원 경력을 다 인정받게 되지만 민간경력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박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것 보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감안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음 것 보시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33년 전에 92년에 공무원 퇴직수당 도입됐습니다. 아는 것처럼 공무원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근로자의 퇴직연금 산정은 보통 1년에 1개월 치 급여고 1년이나 30년 근속이나 모두 1년에 한 달 월급이라는 기준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민간의 경우. 그런데 공무원 퇴직수당은 화면처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 4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 수당이 고작 96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거 공기업 중심으로 퇴직금 누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지시켜서 지금은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직, 공무원 사회에 만 여전히 퇴직금 누진제가 있는 꼴입니다, 이런 누진제는. 그래서 공무원 퇴직수당은 근로자 퇴직금에 비해서 산정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1년에 기준소득월액 39%로 일원화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직이 맞지 않으면 이직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은 장기 근속자가 아니면 페널티가 너무 큼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재취업 직업교육도 배제되고 퇴직수당은 저연차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서 젊은 공무원은 그만두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은 퇴직수당 차별 폐지, 지급률 일원화를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는데 차별로 보이는 이러한 퇴직수당 산정 기준 일원화하는 제도개선 의견이 어떠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따져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하다 보면 모든 기관들이 인력 부족하다면서 인력 달라고 하는데 민간 직장은 상상할 수 없는 공로연수, 현재 공무원들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박민규 위원** 공로연수 이유를 물어보니까 퇴직 전 일정 기간 사회 적응 준비 또는

인사 적체 해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공로연수 제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공직에만 존재하는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공로연수 제도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요 퇴직준비 교육기간으로 설정해서 퇴직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가르쳐 주고 훈련도 시켜서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박민규 위원** 공직과 민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 맞나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최교진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민규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6대 구조개혁 말씀하셨어요. 규제개혁·금융개혁·공공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 거기에 교육개혁이 있습니다.

한번 표 보시겠어요?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4년제 대학 입학자 수 및 수능응시인원 30년 치입니다. 95년도에 수능응시인원 대비 입학자 수의 차이가 46만 5000명 그러고 나서 2010년—15년 전이지요—수능응시인원 대비 입학자 수 차이가 22만 4000명으로 24만 명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6만 3000명이 응시인원인데 대학 입학자 수는 34만 7000명, 11만 6000명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점점 대학 정원하고 응시한 숫자가 지난 30년 만에 무려 30%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미래 추산인데요. 나중에 결국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서 무려 70% 정도가 대학 들어가는 이런 표인데…… 저 화면을 보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대한 법률 통과시켜서 사학들 재정 진단해 가지고 재정 어려운 데들 엑시트하도록 만드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민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세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구조개혁이 중요한데.

○**교육부장관 최고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사학이라 하더라도 원래 사학 건학 이념에 따라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실제로 정리해야 할 때 그것이 크게, 첫째는 그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사학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읍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국무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힘드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괜찮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중장 진급자 20명을 20시에 발표했는데 이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군의 진급과 관련해서 흥흥한 군심, 이 흥흥한 군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괄 교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장관님은 ‘내가 지시한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추후에 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한번 슬라이드를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군조직법에 분명하게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장관님의 부하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분명하게 부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관님과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하가 어떻게 상급 지휘관하고 조율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께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와 같이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장관님이 군기를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참의장이 저하고 상하 관계의 입장에서 제가 의장이 한 말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지휘를 계속해야 할 사람이니까 또 배려를 해 주시려고 하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SBS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기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안규백 장관과 일절 상의하지 않았다’ 이게 뉴스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제일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비선이 있고 비선으로 통한다’, 장관님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선이 있다는 것이 이 보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비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건 뉴스의 팩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기호 위원** 그런데 4성 장군들 인사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사실 장관님이 용산에 안을 올렸으나 한 번 다시 반려가 되고 두 번 올리고 세 번째 올려서 7명의 장군 인사가 됐다, 거기에 비선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항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이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특기병 또 소외돼 있지마는 역량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안보의 공백을 없애고 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제청을 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직접 인사를 하셨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진급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국방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 특별진급을 시켰습니다. 군인사법에 특별진급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저 특별진급 요건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반적으로 한글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4번에 해당되고 또……

○한기호 위원 그 밖에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진급권자가 인정한 경우……

○국방부장관 안규백 3번, 4번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저기 군인사법 4번 항에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발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군의 진급은 총 17명의 진급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저러한 절차를 가지고 진급을 시킵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연평과 천안함 폭침 때도 특별진급이 있었고 저러한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진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하여튼 저런 제도라는 것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인원이 몇 명이나 하면 17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령에서 대령 정상 진급할 때 총 공석을 발표한 내용 중에서 육군에서 8명이 사실은 공석으로 진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명을 빼고, 168명이라고 했는데 160명만을 진급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진급은 168명을 올려 보냈는데 장관님이 8명을 빼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또 하나는 2025년도 진급 선발에서 24년도에 발표한 내용 중에 17명이 저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명한 진급심사위원이 그 명령지에 첨부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것은 이름을 제가 다 가렸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건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급심사를 하지 않고 진급시킨 인원이 있고 빼 버린 인원이 있다라고 지금 군에서 말이 돌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리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누구보다도 군의 진급 시스템 체제를 잘 아시는 위원님이……

○한기호 위원 잘 아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진급심사에 일곱 번 들어갔다 왔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18대부터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급과 관련된 인사 청탁은 이렇게 진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진급 선발 인원이, 위원들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특진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저것에 구성된 인원들이, 그러니까 중령에서 대령 17명의 진급심사 인원, 소령에서 중령 17명의 진급심사 인원들이 육군에서 진급심사위원으로 지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심사했냐, 안 했냐.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연히 소집해서 심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장관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 특별진급한 건데. 그러나 지금 군에서는 소집해서 진급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17명이기 때문에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은 합치면 무려 34명입니다. 34명이, 전 군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와서 진급심사하고 다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거지요. 안 불렀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불렀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불렀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의 진급과 인사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한기호 위원 아니, 잘 알지요, 제가.

○국방부장관 안규백 더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진급심사를 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특별진급자도 진급심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진급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렇게 지명된 17명을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들 심사위원들을 그대로 불렀느냐 이거야. 소령에서 중령 심사위원들이 지명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심사를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교육부장관님, 지금 국제학교 설립을 강원도 제3차 개정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찬성하고 있지 않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한기호 위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데 대해서.

○교육부장관 최고진 이번에 비영리……

○한기호 위원 비영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게 비영리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동안에 국제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비영리를 조건으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합의가 돼서……

○한기호 위원 아니,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법을 발의했으니까. 그런데 비영리에 대한 범위나 이것을 다시 구체화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강원도의 지금 학급당 학생 숫자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학생 숫자가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보면 전국 평균에 저렇게 미달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실제로 외국인들 초등학교도 우리가 비자를 내 주자, 유학 비자를. 그런데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전향적으로 검토 안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특별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이거와 유사한 법이 전북특자도법에 관련해서 21대 때 보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해당 조항이 삭제됐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가 취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한기호 위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핑계로 부모가 오는 게, 부모가 왔는데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게 풀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법 개정해 임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림 한번 봐 주시지요.

풍수해에 대한 것을 이번에 종합정비사업 선정했는데 강원권 4개를 했습니다. 경상권 20개고, 전라권 9개고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온 곳에 그다음 해도 또 옵니까, 풍수해가?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곳이라고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봐 보시지요.

저거는 2020년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저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 철원 지역이 신청하니까 아주 밑에다가 서열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풍수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게 실제로 2020년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 2020년 때 저기 수해 복구하러 갔다도 왔습니다.

○**한기호 위원** 갔다 오셨지요? 갔다 오신 분이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DMZ에 매설된 지뢰가 떠내려와서 지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뢰가 유실돼서 수거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도에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경 지역은 그냥 단순히 수해에 의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지뢰에 의한 피해까지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좀 시켜 주시고 안 되면 예산의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라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발발 초기의 춘천대첩, 영남을 지킨 낙동강전투, 승기를 잡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맞습니다. 6사단이 춘천에서 방어를 함으로써 춘천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벌어서 실제로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는 기회를,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다부동전투입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탑이 저렇게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6·25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춘천대첩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전적기념관이 있고 평화공원이 있고 시민공원이 있고 춘천 옥산포 전투지가 있는 것으로……

○**한기호 위원** 그래서 비석이 여기저기 하나씩 떨어져서 있습니다, 옥산포 전투에는 옥산포 전투 비석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것을 호국광장을 조성해서 저와 같은 기념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3대 대첩에 걸맞게 해야겠다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강원도가 6·25 전쟁 때 피해가 전국 2위입니다. 13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인구가 적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보훈부장관님도 안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해 줘야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 승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회사무총장님 와 계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파병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파병을 말씀……

○**한기호 위원** 예, 파병. 국군이 해외에 파병 나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제가 보니까……

○한기호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해외 파병이 2015년 3월에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한기호 위원 아니, 몇 년도가 아니라 제가 몇 군데냐고 물으면 몇 군데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

○한기호 위원 네 군데 나가 있지요. UAE하고 그다음에 아덴만하고 남수단하고 레바논하고 네 군데 나가 있지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국군이 나가서 있는데 이곳에 국방위원들이 한 번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 그사이에 또 나가셨네.

남수단 같은 경우 남수단에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사이에 딱 두 번 갔다 왔습시다. 아덴만 지역도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국군이 해외에……

여기 계시는구나. 이쪽에 있는 줄 알고 잘못 봤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국회 예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기존에 국방위원회에 할당된 예산 외에는 따로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군이 나가 있는 데 대해서 국방위원들이 가서 실태를 보자는 거예요.

그것 편성 못 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국방위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

○한기호 위원 아니, 다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방부장관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이 평화 유지, 세계평화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점이 우리가 지원할 점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뭔가 직접 현장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편성해야 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이.

국회사무처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 할당된 해외출장 여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남수단에 가 봐서 알지만, 우리 장관님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힘들고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이 열악한 데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 봐야지요. 레바논, 위험하다고 겁니까? 안 가지요. 가 봐야지요. 왜 안 갑니까? 아덴만에 나가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 가 봐야지요. UAE에 나가 있는 특전사들 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해 달라고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해도 편성 안 해 줍니다. 이번에 좀 하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아마 그 사안은 국제국 특정외교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장관님 힘 좀 쓰십시오. 힘 있을 때 힘 써야지 엉뚱한 데 힘 쓰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잘할 텐데 저한테 질문을 직접 안 하셔 가지고……

○한기호 위원 과거에는 국방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러나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열악한 데니까 구태여 거기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예, 충분히 그 취지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의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지 그거 못 합니까, 뭐든지 하시던데? 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법무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 기재부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예결위에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현안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판결문 다 보셨습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확히 사실 요약한 핵심 부분만, 특히 무죄 부분만 주로 봤습니다.

○김한규 위원 698페이지인데요. 제가 개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예산 시근에 이게 뭐 하고 있나,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형사 판결문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드는데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더니 법원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증거 채택했고 또 형량과 몰수·추징액을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1심 법원이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사정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민사소송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433억을 몰수·추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나중에 피해를 본 성남도시공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 이해가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성남도시공사의 손해액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시하셨는지 여부와 별도로 검찰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판결문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1차 수사팀에서 공소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공소장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그 공소장이 대폭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갖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몰아가고서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조서들을 갖다가 대거 제출했는데, 물론 그건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수사팀에서 피해액으로, 배임액으로 인정했던 부분이 650억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것이 별다른 근거 없이 4800억으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7800억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일방적인 검찰의, 검찰이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버리고 2차 수사팀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야말로 공소 내용을 확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사건을 항소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헌법 때문에 임기 중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무엇이든 좀 계속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이라면 이런 사건은 항소 안 하는 게 맞고 검찰도 안 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오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지시하셨는지 여부와 별도로 이 사건은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오늘이 11월 13일이고요. 저는 차수변경 안 하고 11월 13일 날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계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1주기가.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데 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보니까, 여기 보면 장관님 성함도 참여 의원 명단에 들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 국회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도서관 쪽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막고 있는데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요. 정문으로는 못 들어왔지요.

○**김한규 위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데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막아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막았지만 어떻게든 담벼락을 힘들게 넘거나 아니면 장관님처럼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 시간에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거나…… 여하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저희가 계엄 해제를 못 해서 불법계엄이 한 이삼 일이라도 더 지속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계엄 상황이 되면 사법권까지 모두 계엄사령부와 군 재판소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권도 군검찰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신속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런 점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계엄에 같이 참여한 부역자들이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부화수행이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에 며칠만 더 진행이 됐으면 다 드러났을 거고 또 다행히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가 없어서 따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누군가는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불법을 저지른 분도 있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으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보겠는데요. 헌법준중 정부혁신 TF에서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집중점검 대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는 정부의 모든 청사 관리와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무엇보다 장관이 직접 관여하셨잖아요, 당시 전 행안부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궁금해요. 경찰이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막았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담을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은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그렇고 여의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당시 저희 국회 포위한 기동단장들 그리고 이런 업무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수사부장이 그 이후에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서로, 승진을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기동대 부하직원들도 데리고 가서 지금 재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다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해 갖고 일선에 나가서 지휘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는 계엄 가담한 고위직들은 전원 업무 배제하고 중간 간부들도 교체했는데 경찰청은 오히려 승진시킨 이유가 뭐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은 내란 이후에 경찰 내에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본부에서 약 70여 명, 70명 정도의 경찰 내에 내란에 관여가 된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총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 제외 안 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수사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김한규 위원** 아니, 장관님이 증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회를 막고 있었잖아요. 장관님이 그래서 빈틈으로 힘들게 들어왔고, 이분들이 국회 막은 분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인데 사실관계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잠시만요.

일선 경찰에서는 이분들이 소속 직원들을 평가하는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경찰들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누구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냥 단지 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하거나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의심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피의자들 명단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일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TF라는 게 결국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당한 지시인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데 법을 배워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정도 판단을 못 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우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부당한 승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 헌법준중 TF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김한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헌법준중 정부혁신 TF요, 모든 공직자의 핸드폰을 강제

적으로 포렌식 하실 계획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만약에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실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상당한 의심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만약에 정말 혐의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부하면, 조사 비협조하면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은 정말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김한규 위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요 관련 부서라든지 의심되는 혐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구분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사하는 것은 또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님과 같이 협의해서 정해 줘야 일선 부서에서 불필요한 조사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하는 비판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고 내란에 같이 참여할 만한 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계획단계에서 잘 고려해서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실행 과정에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성평등가족부장관님,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업무가 성평등가족 그리고 뭐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청소년정책이……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부처 이름에는 빠졌습시다만 3대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PPT를 보시면 사실 엄청 많아요, 관련 법률도 많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크게 나눠 보자면 청소년 활동 지원이 있고 청소년 보호가 있고 청소년 복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일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처우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데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기준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

○김한규 위원 282만 원인데요.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시설은 이 가이드라

인 대비 인건비가 77~90% 정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출하고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집에 가서 상담하는 청소년동반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오히려 되게 힘들잖아요, 외부로 가야 되고 그 집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들은 가이드라인 대비 인건비가 77%에 불과합니다. 다른 분들도 85, 90 이런 정도의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업무가 다르면 보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아동 복지시설인데요. 청소년쉼터나 아동쉼터나 업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수만 한 40% 정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장관님, 혹시 복지부장관님보다 월급이 적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같을 것입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은 똑같이 받는데 왜 장관님 산하에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복지부장관 산하 시설 종사자들보다 적게 받는 걸 봐두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복지부 산하 시설과 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기재부차관님, 법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준해서 처우를 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 성격이나 업무 강도 그런 게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들의 역사적인 연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혹시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사실 성평등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비슷한 업무인데도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다른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엄청 많은데요. 연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법률적인 연혁이 있다고 현재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비슷한 동종 업무에 대해서는 동종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님 그리고 나와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

으십니다, 지난 6일 동안.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7분, 1020초만 더 버티시면 끝납니다.

저는 교육부장관께 일단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잠깐만요. 계엄, 내란, 대장동,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참겠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생활을, 민생을 돌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계엄 해서 저희가 정권을 잃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셨습니다. 정리하는 것 맞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갈라진 국가를 하나로 다시 뭉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정신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녹아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으로 제 멘트는 마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교학점제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교육부장관 최고진** 많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지난 11월 6일 날 대입 유명한 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기준으로. ‘고교학점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압도적으로 70%가 ‘폐지하자’.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압도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이 걸려 있고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 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퇴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자퇴한 학생의 숫자가—서울입니다—2500명입니다, 벌써. 멀쩡한 학생들 자퇴하게 만드는 게 고교학점제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자퇴하게 만드는 게 이 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입니까? 설마 자퇴 못 하는 자퇴방지법 만들 건 아니지요? 자퇴하는 학생들 비난할 자격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사교육 업체에서 한 여론조사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자퇴하는 학생들은 사교육 업체에 속아서 자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 그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조정훈 위원** 2500명이 자퇴한 건 교육부 자료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러니까 그전과……

○**조정훈 위원** 장관님, 제가 마지막 질의라 돈을 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만 큼은 좀 정리합시다.

2500명이라는 매우 많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이후에 작년, 올해 자퇴하고 있어요. 사실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통계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여서 얘기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아니요. 예.

○**조정훈 위원** 2500명이라는 많은 학생이 자퇴하고 인천의 한 재수학원은 고1 자퇴생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들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자퇴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퇴로 항의하고 있어요.

교육위 상임위 때 고교학점제 없앨 생각이 있냐고 여쭙봤더니 없다고 그러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정훈 위원** 그 말 듣고 절망해서 더 자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 건 아실 테니, 어느 구에서 가장 많이 자퇴하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알려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강남구에서 자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원구·양천구에서 강남구로 이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학생이 많은 큰 학교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학부모들과 학생의 판단입니다. 설마 이것도 사교육 업체에 속아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저는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세대’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동의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이해찬 세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한 말이 있지요,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 달콤하고 이상적이지요. 결과는 뭘니까? 단군 이래 최저학력입니다, 그 세대가. 한 번 학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큰 틀에서 고등학교가 대학교처럼 돼서 192학점 얻어 가지고 졸업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들어서 진로 개방에도 좋고 꼭 대학 안 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진로 해 주겠다, 다 좋은데요 결과는 자퇴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학년 끝나고 전공을 정해야 돼요. 1학년은 공통과목인데 2학년부터는 자기 전공과목 들어야 되잖아요. 1학년 끝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 결정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퇴입니다.

제가 경고할게요. 이 학생들 지금 1학년이지요? 2027년 이 학생들 대학입시 봅니다. 2028년 총선 직전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장관님. 그때 아마 장관님은 장관 아니실 겁니다. 아니면 최장수 교육부장관이실 텐데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학생들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대학 가는지 이런 혼란을 만들어 놓고……

국교위원장님 계십니까, 차정인?

상임위 때 많이 논의는 했는데 지금 이 자퇴하는 현상들, 학부모 잘못입니까? 학생들이 잘못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고교학점제……

○**조정훈 위원** 자퇴하지 말라는, 자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1학년과 작년 1학년 학생들은 아바타입니까? 그냥 한번 던져 보고 안 되면 다시 돌리는…… 지금 올해 고1, 작년의 고1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준비도 안 되고 작동도 안 하는 고교학점제 밀어붙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부작용 있었던 거 이해합니다. 저 같으면 이거 국정과제였으면 당장 폐지했을 겁니다. 이걸 비현

실적이에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님 걱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제도인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금년에 시작하자마자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긴급한 보완조치를 시작했고 지금 국교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상당히 압축적인 다각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중에는 늦어도 행정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벌써 2타수 2아웃, 삼진 두 번 먹으신 거예요, 이재명 정부.

첫 번째는 부동산정책입니다. 지난번에 총리 나오시고 장관 나오실 때 국토부장관도 준비 안 됐다는 것 다 동의하셨어요, ‘해 가면서 보완하겠다. 워낙 급해서 했다’. 그런데 10월 15일 부동산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혔다고요? 아닙니다. 거래금지, 모라토리엄 하신 거예요. 이거 풀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겁나서 이 풍선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두 번째 아웃당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학부모가, 2500명이 서울에서만 자퇴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조정훈 위원**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조정훈 위원** 장관님 그리고 국교위원장님, 오늘 여기서 결론 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세요. 빨리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준비해서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아바타로 만들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진보 정치·교육을 지향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정책은 실패합니다. 이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대장동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되는 기성세대 정치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정서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집회를 깡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자유시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적지 않은 국민들이 특정 국가 또는 크게 봐서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을까, 계기가 뭘까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커지는가, 정치인 한두 명이 선동한다고 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관님, 왜 이런 반중 정서 또는 반외국인 정서가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뭐 여러 가지……

○**조정훈 위원** 그건 동의하시지요, 퍼지고 있다는 것?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줄 요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 젊은 세대의 어떤 희망이 없음 또 절망적 상황들 또 좌절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큰 틀에서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 이걸데 이것을 촉발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2~3개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외국인정책·이민정책,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책임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하나는요 무비자 입국이에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저는 중국인 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비자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을 입국시킬 이유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제도를 저는 다시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 한번 꼼꼼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얘기도 있는데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지요.

이게 퍼져서, 적절히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 밀집한 지역들이 지금 곳곳에 생기고…… 모를 수도 있으십니다.

장관님,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한 지역에 외국인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에 하나가 외국인일 경우에 밀집지역인데 우리나라에 100곳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이 많아서 21대 국회의원 법사에 있을 때부터 이민청 만들자고 처음 주장하던 의원입니다. 법무부 팔 비틀어서 그때도 외국인 집중지역 받았는데 그때는 20~30개였어요. 2~3년 만에 100개가 됐습니다.

서울에…… 제가 저 표를 보여 드릴까 말까 며칠을 보좌진하고 고민했습니다. 왜 제가 고민했을까요? 혹시 저 동이 낙인효과가 찍힐까 봐 제가 고민했는데 지금 결론은 그런 생각조차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이 있다면 떳떳해야지요. 당당해야지요. 저 동네 특성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런 것 얘기하면 낙인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 자체가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84%, 거기는 한국인 찾기 어려운 동네인 것 아시지요?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 영등포구에, 연수구에 지금 48·36·42%의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유럽의 정책들을 보면요 이민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 놓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몇 %를 넘지 못하도록 또 외국인 자산 구매 비율이 몇 %를 넘지 못하도록 이런 제한을 둬으로써 외국인 혐오 정서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정책은 꽤 배울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니까……

최근에 무슨 연예 프로그램 등등에서 우리 경찰들이 단속하러 갔다가 중국어로 얘기하는 가게 주인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경찰, 그런 게 우리나라 연예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언제쯤 발표됩니까? 이민청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저도 법사위 활동하면서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사실상 외청 형태의 독립적인 이민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과거에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민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도입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또 이런 밀집지역에서의 어떤 집산화·조직화된 행태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21대 때,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이민청 막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대한 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계속 보류시켰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리고 여야 간의 협상의 카드로 쓰셨습니다. 저는 그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정성호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이 되실지 그때는 모르셨겠지요. 이런 것은 협상에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라도 빨리 이민청 만들어서 이민정책, 도대체 1년에 이민을 얼마나 받을 건가, 우리나라 이민 비율을 몇 %로 할 건가, 그러면 인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사람 받을 것인가, 남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달라는 대로 비자 발급해 주고 이제 지자체 단체장까지 비자 발급하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이것 20년 가면 10년 가면 한쪽에서는 망가진 이민정책 또 한쪽에서는 외국인 혐오, 난리가 납니다.

장관님, 선진국 중에 이민정책으로 대선에 싸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 사전에 막는 게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하자고 한 것이 이민청인데 그것을 1년이나 막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근에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좀 보고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이민청 수준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들을 종합한 정책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 1분은요, 이것은 또다시 정쟁이 아닌데, 간첩법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장관님께서 간첩법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10대 법안 선정해서 법사위에 요청을 하고 원내대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장관님, 공교롭게도 1년 전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법이 통과된 게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 동안 민주당에서 보류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는 민주당이 책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한 이유가 공청회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 하셨습니다. 그동안 간첩 활동이 없었을까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아시지요? 이런 것들이 쌓여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외국인 혐오 정서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압니다. 그런데 무비자 와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작은 뉴스라도 자극적이지요. 외국인 밀집지역 이렇게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지요. 간첩법 만들자고 하는데 무슨 이유론지 1년 동안 막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저희 국민의힘더러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은 하고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도 좀 적극적 입장을 더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외국인 정책을 빨리 좀 우선순위로 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혐오 정서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외국인 혐오 정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그 화를 뒤집어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정말 이 일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충정으로 듣고 저희 정말 더 애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시다만 9월에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 운영 개선 1차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실제로 학교에서 상당 부분은 안정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온라인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해서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같은 것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계시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모든 얘기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2500명이나 서울에서 자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발언……

○**위원장 한병도** 장관님,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어쨌든 열심히 이게 고교체제 개편을 해서 처음……

○**조정훈 위원**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시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데는 처음부터 좋아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로 고교학점제라는 뗏을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처음 출발할 때의 정신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원하시면 저 차수 넘겨서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께 기대했던 답변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 표현 한마디였어요. 자퇴 누가 좋아서 했겠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 자퇴할 때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어야지요. 이제는 안정됐다고요? 그게 교육부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병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고 수시로 협의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과 박형수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식·조정훈·최형두·조배숙·조계원·임미애·김한규·전종덕·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옛새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의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시느라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보좌진 여러분,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

○출석 위원(45인)

고민정	곽상언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김기웅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차장 박태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2차장 김용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차관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최규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부위원장직무대리 이정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